

2019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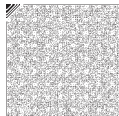


vol. 631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나라를
지킨



송고한
희생



이어
가겠습니다



평화
의길로



국회보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31, June 2019

[표지이야기]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외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서고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들은 모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었습니다.
국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이 만든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새기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발행일 2019년 6월 3일

발행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편집인 이춘규 홍보기획관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한공식 위원장(입법차장)

김승기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위원(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위원(기획조정실장)

이용준 위원(법제실장)

이강혁 간사(홍보담당관)

편집실무위원회

윤상은(보좌관), 제방훈(보좌관), 최정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중해(취재보도 사무관), 김현아, 고영선, 박민선, 서기정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촉진자로서의 중국 역할 당부”

문화상 국회의장,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것처럼 준비해 달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기공식

특집_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10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보다 인식 개선이 우선_김종민 의원

12 인사청문회 결과 존중하도록 제도화해야_이만희 의원

14 제도 개선보다 제도 존중이 먼저_유의동 의원

16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하고 검증 기준 세분화해야_조성대

18 제20대국회 인사청문 제도개선 논의 현황과 과제_김승기

20 미국 의회의 인사청문제도 개혁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_전진영

22 위원장 초대석_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엄중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 모아야

24 길에서 길을 찾다_김선동 의원
천혜의 명산 도봉산 품은 행복타운 도봉





- 28 칭찬합시다_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내실 있는 복지 위해 중장기 비전 세워야”
- 30 나의 애송시_김종희 의원
외로움은 벗이자 침잠의 시간
- 32 나의 인생 나의 정치_이용득 의원
노동자가 중심인 나라를 꿈꾸다
- 34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GTX-B노선·화폐개혁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38 법률 시대를 읽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_전상수
- 40 기고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과제_이용준
- 42 주재관리포트
미국 연방의회의 힘_김영일
- 44 법 시행 현장을 가다
‘평생교육법’
- 46 만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48 국회 뉴스

- 56 임시의정원 사람들
임시정부의 존립위기를 수습한 송병조 의장_한시준
- 59 국회스케치
- 60 경제이야기
불법 공짜폰은 왜 자꾸 나오나_이진우
- 62 취재수첩
패스트트랙, 협상의 의미를 다시 떠올린다_박경훈
- 64 미래과학을 읽다
금속 제품도 원하는 모양대로_고호관
- 66 오천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_이광표
- 69 그때 그 사건
피란길에 오른 제2대국회, 군복에 권총 찬 의원
- 70 역사 속 길을 찾아
전쟁의 상흔에서 피어난 푸르른 생명들_장태동
- 73 생활 속 우리말글
‘있다’와 ‘없다’의 띄어쓰기_김미형
- 74 정치 관련 주요 일지
- 76 편집 후기
승고한 희생 위의 소중한 평화_이춘규



“한반도 평화 촉진자로서의 중국 역할 당부”

문희상 국회의장, 중국 공식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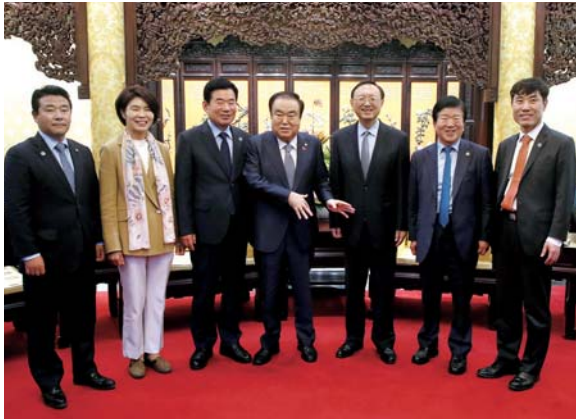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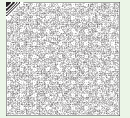


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7일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양제츠(楊潔篪) 중앙정치국 위원 등을 만나 양국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역할과 경제·통상·환경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6일(현지시간)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의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양제츠 주임과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관



문화상 국회의장과 방중단이 5월 6일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정 의원, 한정애 의원, 김진표 의원, 문화상 국회의장, 양제츠 주임, 박병석 의원, 하태경 의원.



문화상 국회의장이 5월 7일 베이징대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련해 “환경문제는 초국경적인 문제이고 기후변화와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제츠 주임은 “양국 전문연구기관들의 연구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의장님의 방문이 원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문화상 국회의장 “중국의 남북미 가교역할 기대”

5월 7일에는 중국 최초의 비정부 외교 및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차하얼(察哈爾)학회 회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중국의 안보리 제재이행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었다”며 “현재 북미협상의 소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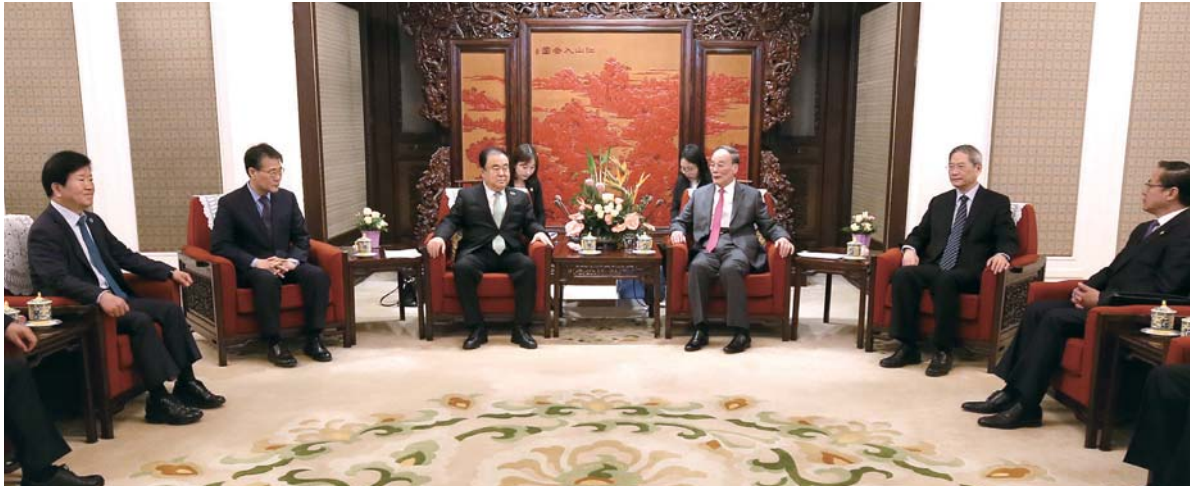
문화상 국회의장은 같은 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한중(韓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베이징대학 특강을 진행하면서, 양국 간 정치적 소통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중 양국이 상호 간에 경제·문화적으로 긴밀하게 공유하는 현 상황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국민들의 현재와 같은 공감과 변화에 대해 양국 정부와 의회가 깊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중국의 가교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가자”고 밝혔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한반도 평화 함께 추진할 것”

문화상 국회의장은 이날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미세먼지 공동대응, 문화교류 등에 대해 상호의견을 나눴다.



문화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방중단이 5월 8일 중국 왕치산 국가 부주석 일행과 면담을 하고 있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양측이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회담 성사와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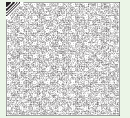
리잔수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는 각측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근본적으로 안보문제여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님께서 양국관계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여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계속해서 한국과 각 분야에서 소통을 유지·강화해, 한반도의 지역평화를 같이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지방 정부 간 또는 지방 투자 기업들 간 즉각적인 협력·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미세먼지 문제

와 관련해서도 해결책 마련을 위한 양국 의회 협력을 다짐했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방중 마지막 날인 5월 8일 왕치산 국가 부주석과 면담을 가졌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기적같이 찾아왔는데 요즘 상황이 엄중하다.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컸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왕치산 부주석은 “시진핑 주석도 한국 국회 대표단의 방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정상과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외교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문화상 국회의장,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것처럼 준비해 달라”

제71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



5월 27일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문화상 국회의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71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이 5월 27일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렸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기념사에서 “제일 먼저 국회 가족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회의 생일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싶다”면서 “지난 1년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합심했던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회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화상 국회의장은 “국회가 장기간 정쟁과 혼란에 휘말려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회 가족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것처럼 준비해주시

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상 국회의장은 “제20대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뤄낼 천재일우의 기회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멀리 보는 정치를 기대한다. 제20대국회의 사명을 깨닫고 천재일우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저 역시 하루하루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절박함이 커지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책무이기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기공식



5월 17일 열린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립공사 기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유인태 국회의무총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립공사 기공식이 5월 17일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위치한 건립부지에서 열렸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국회도서관 자료를 분산 보존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지상 3층, 연면적 1만3천661㎡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주요시설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전시실·세미나실과 국가문헌 보존을 위한 서고 등이 있다.

유인태 국회의무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

사업은) 부산에 단지 건물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서관의 지식 정보 거점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발판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과 유인태 국회의무총장, 오거돈 부산시장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수홍 국회의원사무차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



특집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6월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해 공직자로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청문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를 검증한다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일부에서는 정쟁의 대상이 되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청문회 제도 개선방안과 미국의 청문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보다 인식 개선이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인사청문회 결과 존중하도록 제도화해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제도 개선보다 제도 존중이 먼저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하고 검증 기준 세분화해야	조성대 교수
제20대국회 인사청문 제도개선 논의 현황과 과제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미국 의회의 인사청문제도 개혁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전진영 입법조사연구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보다 인식 개선이 우선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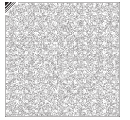
2000년 6월 한국의 첫 인사청문회였던 이한동 국무총리 청문회가 실시된 지 19년이 지났다. 200년이 넘는 미국의 인사청문회 역사와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인사청문회는 3권분립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계된 한국의 권력구조 안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해왔다. 제도적으로는 청문회 대상과 기간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견제기능을 강화했고, 인사검증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높아지고, 고위 공직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갖게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재판식 신상털기 검증으로 인해 국가의 인재들이 고위공직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고, 정치권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면서 제도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서 벗어나고 있는 최근의 모습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인사청문회

33.3%.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가 미채택된 비율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15.2%)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기능을 잃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편에서는 어차피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보고서를 채택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적 미비점도 있겠지만 이처럼 인사청문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윤리성 검증을 업무능력 검증과 분리하되, 검증의 수준을 강화하고, 청문 대상의 확대와 기간의 연장,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등과 같이 청문회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



었고, 발의된 법안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의기관인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부적격일지라도 의견을 취합해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 자체에 담겨 있는 국민주권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채 청문회 무용론을 논한다는 것은 이러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제도적 개선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준청문회’가 아닌 ‘인사청문회’임을 명심해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제 국가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 헌법은 고위 공직자의 임명에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의원내각제 국가들처럼 정부가 국회로부터 ‘인준’과 같은 신임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구성에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국민주권적 의사표시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가 대통령이 고른 인사들이 문제가 있는지 검증해 대통령의 결정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 인사청문회 도입의 취지인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팩트’에 근거하고, 국민이 이에 동의한다면 대통령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사퇴 2, 지명철회 1)와 문재인 정부(사퇴 3, 지명철회 1) 모두 여론에 따라 입장을 바꾼 사례가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과장과 왜곡된 주장들을 근거로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국민들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견제하는 것을 넘어 관여

까지 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책검증 강화, 윤리검증 더 전문적으로

앞서 언급한 제도적 개선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윤리검증과 정책검증의 분리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의 보고를 받지 않으면서 인사검증 능력에 공백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국정원의 ‘존안자료’에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온갖 정보가 다 들어 있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관행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으니 현재 청와대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는 윤리검증이 별도의 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국세청, 감사원 직원들이 파견되는 검증 기구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민정수석실은 정무적 판단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후보자에 대한 윤리검증이 훨씬 강화될 수 있고, 이는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정책검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윤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처럼 공직후보자가 사전검증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한다. 인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인사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그 어려운 인사를 보완하기 위한 민주적 수단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여야의 위치에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인사청문회 결과 존중하도록 제도화해야



이만희 의원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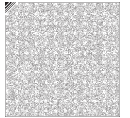
인사는 메시지다. 능력이 부족해도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을 발탁한다면 그것은 전체 조직원에게 능력보다는 조직의 융화가 중요하다고 알리는 것이고, 부서원과의 소통이 소홀해도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임명한다면 각자에게 업무 능력을 극대화하라고 전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사권자가 인사를 실행할 때는 당사자에 대한 보상이나 향후 기대되는 성과보다 전체 조직원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현재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며 향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개된 청문회 대상자들의 각종 법적, 도덕적 논란은 그 자체로 공직자들에게 구체적인 윤리 기준이 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공직 사회는 물론, 유독 국민적 신뢰가 취약한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도 부족하나마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켜야할 선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부작용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화하거나 있으나마나한 통과의례로 전락시키자는 것은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면서도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치열해져가는 국제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원칙을 더욱 공고하게 구현하고 국가투명성을 높여, 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헌을 통한 통치구조의 변경 등 근본적이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한 방안을 제외하고 현실적인 개선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적인 얘기지만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청



와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즉, 지명이 되자마자 불법, 편법, 각종 특혜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그런데도 청와대는 모든 논란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하면서 청문회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도덕적 결함과 의혹이 증폭되어 국민의 외면과 실망만 불러올 뿐이다. 결국 청와대가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정권창출에 대한 기여나 적극적 지지 여부를 기준삼아 소위 ‘내 사람’에서만 인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진영을 뛰어넘어 전문성 및 경력과 함께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고, 이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지명하고 국회에서 청문절차를 갖도록 요청해야 한다. 더 이상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내부 검증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사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 함께 진행돼야

이와 함께 구현돼야 할 것이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존중이다. 현 정권 들어 장관급 인사 14명이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현실은 역설적으로 인사청문회 결과를 어느 정도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명백하게 부적격 인사로 판단하거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경우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장도 이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여권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 표결로 동의 여부를 정해온 것은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오랜 세월 동안 이뤄진 것이어서 이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다소 불합리해 보인다.

이 부분은 여야 협상으로 방안을 찾아야겠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도록 명시화하는 것

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처럼 ‘어차피 국회 인사청문회는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인사 참사를 반복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아울러 현 정권 들어 ‘청와대 정부’라 불릴 만큼 대통령 참모인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장관보다 국정을 주도하는 현실을 감안해 현재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더욱 내실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15일에 불과한 인사 청문 기간을 최소 2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국회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해 명백하게 법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지금과는 달리 청와대가 검증한 자료를 처음 청문 요청 때부터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인사추천 및 검증의 책임이 있는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등을 청문회에 출석토록 하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덕성 검증 등 일부를 비공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비공개 대상을 공개한 국회의원의 처벌 여부 등 제약이 많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방법은 원천적으로 비공개인 청와대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며, 다만 일부 표준화된 윤리 검증 등에 대해서는 국회 내 상설 위원회를 두고 1차적인 검증을 한 뒤 상임위로 회부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은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인사권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실력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제도 개선보다 제도 존중이 먼저



유익동 의원
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

인사청문회 제도화는 지난 2000년 이한동 국무총리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따지면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다.

정권이 새롭게 들어설 때마다 국민들에게는 기대감이 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 과거의 문제들이 일소되어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다.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통령의 결단과 입장 발표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환호한다.

장관 등의 임명도 그런 결단 중의 하나다. 정책 책임자를 임명한다는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한 권한 행사이고, 많은 국민들의 환호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정치적인 성격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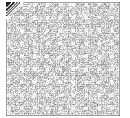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부 공직 후보자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환호의 요소들이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각이 단행될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자리한다.

이유인즉 적임자라고 추천을 한 후보자들에게서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권과 철학을 공유한다는 후보자들에게서는 전문성의 결여가, 또는 전문성이 있다는 사람들에게서는 개인적인 흠결이 발견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어느 정권마다 상징적인 인사가 있다. 그런 상징적인 인사만이라도 개인의 삶이나 정책 전문성에 시비가 없으면 좋으려만, 어김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거리가 생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무기력감까지 들 정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대 내각의 임명을 마무리하는 데 195일이 걸렸다.



바로 이 한 문장에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순기능 그리고 반대로 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한계가 다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

초대 내각을 꾸리는 데 195일이 걸린 것은 역대 정부에 비해 매우 긴 시간이었다. 대통령은 가급적 하자가 없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 당사자들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고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오래 걸린다. 얼핏 생각하면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본질적인 기능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부실한 검증이 개인 신상 검증에 집중하게 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왜 우리 인사청문회는 인신공격의 장이 되는가? 전문적인 정책검증의 장이 될 수는 없는가’ 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현재 상황하에서는 그렇게 고상하게 바뀌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정부도 인사 5대 원칙, 7대 원칙을 천명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는 못했다. 인사검증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후보자 개인이 자기검증을 위한 몇백 개의 문항에 답을 하고, 그 답이 사실인지 여부는 정부기관을 통해 꼼꼼히 검증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개인 신상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해소되지 못한 후보자들이 청문회장에 서게 된다. 개인 신상의 논란은 정책 문제보다 훨씬 더 강한 휘발성을 가진다. 후보자를 낙마시키고자 하는 야당에는 좋은 소재일 수밖에 없다. 언론에도 좋은 소재다. 그래서 어렵다.

미국의 경우는 인사청문회의 역사가 200여 년에 가깝다.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인사 청문 직위가 1천여 개

로 우리보다 많다는 것, 또 행정부 차원의 개인 검증이 우리보다 철저하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당초 추천 단계부터 개인 검증이 철저하다면 개인적인 논란이 있기가 어렵다. 개인 검증이 철저하다면, 미국처럼 개인적인 문제는 비공개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검증이 철저하지 못하고 그 잣대도 고무줄처럼 운영된다면, 개인적인 논란이 청문회의 주요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논란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임명이 많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임명할 것이라면 저렇게 요란하게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제도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이 아닐까?

대부분의 제도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언제나 제도는 회피하려는 의도와 지키려는 노력 사이에서 보완되고 변화된다. 누구 하나 지키려는 사람 없이 회피하려는 노력만 기울인다면, 어떠한 개선으로도 좋은 제도를 만들어갈 수 없다.

민주주의 정신이 녹아든 제도라면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따르고 정신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하고 검증 기준 세분화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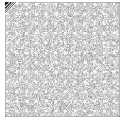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지명철회, 자진사퇴, 경과보고서 채택불발 등의 난항을 겪으며 종료됐다. 후보자 낙마율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인사검증 원칙으로 5대 비리 등을 제시하며 이전 정부보다 엄격한 충원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인사 참사(慘事)니 망사(亡事)니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기 어려웠다. 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을까?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발전국가시대 이래 이어져온 한국 엘리트 계층들의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인사청문제도 파행의 근저에 대의 민주주의가 낡은 제도적 긴장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하는 제도 아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여당 대 야당’의 정파적 이해가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첫째, 대통령은 임기동안 자신의 정치적·정책적 비전을 구현하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공유하는 소위 ‘코드’가 각료의 선발기준으로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자칫 임명된 각료가 대통령의 선호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빚어지는 정부 내 엇박자 갈등, 관료 통제의 약화, 지지자 집단의 이탈 등을 피하고자 함이다. 여기에 자질과 능력이 첨가되면 금상첨화다. 즉 가치와 노선을 공유하며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를 임명하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지극히 합리적인 행위다.

둘째, 책임 정당 정부라는 대의제의 원리는 여당에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정책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역할을 부여한다. 따라서 여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이 내정한 후보자를 보호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근거 없는 것이라 방어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대통령의 권위를 옹호하고 동시에 후보자의 리더십 손상을 최소화해 향후 국정 운영이 원활하도록 유도해주며 궁극적으로 국정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합리적 계산에서 비롯된다.

셋째, 야당의 이해는 대통령과 여당의 그것과 정반대이다. 야당의 성공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실패가 필요조건이다. 코드인사로 충원된 행정부는 대통령의 선호와 일치되어 움직이며, 이는 야당이 원하는 정책이 철저히 배제됨을 의미한다. 만약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성공한다면 야당은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야당의 합리적 계산은 고위각료의 충원과정에서부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에 흠집을 낸다는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도덕적·윤리적 공세는 가장 손쉬운 선택이다. 전문성 검증에 비해 정보수집이 용이하고 대통령에게 더 큰 상처를 낼 수 있으며 대중적인 주목도도 현저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부터 2017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까지 총 341명의 고위공직자 후보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결정적 낙마 사유는 부동산 투기나 금전적 부당이익이 표면적인 이유로 작용한 가운데, 이념 문제, 대통령과의 권력 거리, 야당의 체면을 위한 ‘주고받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즉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여당과 야당 각각의 정치적 이해가 정면충돌해 사회적으로 비합리적 결과를 생산하는 공간이며 정치가 양극화될수록 파행은 더욱 극한 양태를 보일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 어떤 훌륭한 제도도 긍정적 효과를 바라는 이들의 기대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대안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다. 대통령제를 최초로 디자인했던 미국의 건국 주역들은 정부의 주요직에 최양질의 인사가 충원되도록 하는 것

이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를 배제하는 과정으로 청문제도를 생각했다는 점이다. 국회의 역할은 ‘잘된 임용’으로 최고의 인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임용’으로 행정부가 오작동할 기회를 줄이는 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눈높이를 다소 낮춰 바람은 불게 하되 해충들의 유입을 막는 방충망으로 인사청문제도를 바라보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

검증 기준 등 인사청문회법 개정해야

다음으로 제도 개혁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과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문회 과정을 비공개와 공개 부문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낙마의 주원인이 되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사전검증 단계에서 청와대와 국회가 긴밀히 조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보면 어떨까 한다. 이를 위해 검증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리스트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검증 기준에 맞게 세분화하고, 후보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할 시 여야 합의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합리적인 사전검증을 위해 시민사회나 학계 등의 외부기관이 참여해 자문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물론 소요되는 시간에 맞게 인사청문회 기간도 늘려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개되는 인사청문회는 사전검증 단계를 통과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역량을 주로 검증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정파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의 처방도 완벽할 수는 없다. 정치적인 파행은 법률로 제도를 소상히 마련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접근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제20대국회 인사청문 제도개선 논의 현황과 과제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는 2000년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 이래, 당초 헌법상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23개 직위에 한정되어 있던 인사청문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현재는 국무위원 및 주요기관장 등을 포함한 총 65개 공직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실시 기간도 당초 12일에서 15일로 연장했으며, 법정 기본제출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 신상검증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운영되었다는 부정적 평가 등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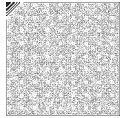
제20대국회에서도 국회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분리실시, 자료제출권 강화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인사청문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제도개선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제20대국회에서 논의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주요사항

이하에서는 제20대국회에서 발의된 총 66건의 인사청문 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 등을 중심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내실화를 위해 도덕성검증과 정책능력검증을 분리해 실시하고 도덕성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 개인신상에 대한 과도한 의혹제기, 도덕성 검증 위주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공직후보자의 업무적격성, 전문성 등 정책능력 검증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에 대한 개선책이다.

향후 국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분리실시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덕성검증과 정책능력검증 영역의 명확한 구분기준 설정 문제, 도덕성검증 결과와 정책능력검증의 실시를 어떻게 연계시킬지의 문제, 도덕성검증 공개여부와 관련하여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둘째, 국회 자료제출권 강화를 위해 법정 기본 제출서류 확대,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자료 제출 요구권 보완, 자료제출기한 미준수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법정 기본 제출서류는 5종(직업·학력·경력, 병역, 재산, 납세 및 체납실적, 범죄경력)에 국한되어 있어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수 의원이 추가 자료를 중복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사항, 금융관련 자료, 대통령 등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내정하는 과정에서의 사전검증자료 등을 법정 기본서류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향후 심사과정에서 공직후보자 검증 내실화 측면과 임명권자의 인사권 제약 우려 등을 감안해 일정 기준을 설정해 법정 기본 제출서류의 범위를 규정지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충실한 공직후보자 검증에 한계에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해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향후 추가 자료제출 요구권 심사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내실화 법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다른 법률의 법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자료제출 대신 비공개열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은 인사청문 자료제출 기한(5일) 내 자료 미

제출시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하고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제재가 약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인사청문 제도개선 논의시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기관 경고 외에 업무담당자 징계 요구, 해당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소환, 위원회 의결로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등 현재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자료제출을 강제할 만한 적절한 장치가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을 방지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주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허위진술죄 처벌규정은 현행 제12조제2항의 형사상 불리한 자기진술 거부권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심사과정에서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공직후보자 허위진술에 관한 사실 공표 등 비형사적 제재 수단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국회 인사청문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대통령비서실장, 통계청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18개 공직을 추가하자는 개정안,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인사검증을 위해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자는 개정안,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자는 개정안 등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19년간 제도운영상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해 오면서 현재 어느 정도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검증의 장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 인사청문 제도개선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

미국 의회의 인사청문제도 개혁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전진영 입법조사연구관
국회입법조사처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대통령이 지명한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상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0년 이상의 제도운영 경험을 가졌다는 점에서 미국은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제도 개혁을 논의할 때마다 준거 사례로 논의된다. 그런데 인사청문제도의 모국인 미국에서도 인사청문제도의 개혁논의는 지속돼 왔고, 제112대 의회(2011~2012)에서 중요한 제도개혁이 이뤄졌다. 이 글은 최근 10년간 미국 의회에서 이뤄진 인사청문제도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인사청문 대상 공직의 축소 및 인준안 신속처리절차 도입

미국 헌법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과 상원이 공유하도록 했다. 즉 후보자 지명 및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부여하면서도, 이를 인준할 권한은 상원에 준 것이다.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PAS: Presidential Appointment with Senate Confirmation)은 행정부만 해도 1천200개가 넘었다. 비록 모든 PAS 해당 공직에 대해서 인준청문회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많은 청문대상 공직은 후보자 검증 및 인사청문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따라서 인사청문 대상 공직의 축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모색됐다.

제112대 의회에서 상원의원들은 초당적 연합을 결성해서 예전보다 쉽고 빠르게 청문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안과 결의안을 추진했다.¹⁾ 2011년에 통과된 ‘대통령 임명의 간소화 및 효율화법’(Presidential Appointment Streamlining and Efficiency Act of 2011: P.L. 112-166)은 이전까지 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했던 행정부 공직 중에서 163개를 삭제해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찬성한 상원의원들은 상원의 인준안 처리와 관련된 업무

1) Maeve P. Carey, “Presidential Appointments, the Senate’s Confirmation Process, and Changes Made in the 112th Congress” CRS Report, 2012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 법은 상원의 인준안 처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팀을 구성해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서류제출의 간소화방안과 후보자 검증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인사청문제도 개혁의 두 번째 내용은 상원의 인준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인준안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상원은 2011년에 의결한 결의안(S. Res. 116)을 통해서 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 중 272개에 대해서는 상원의원의 반대가 없을 경우 해당 인준안의 위원회 회부와 심사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1인의 상원의원이더라도 신속처리절차에 반대하면 공식적인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 인준과정에서 상원의 통제권이 무력화될 위험을 방지했다. 이 ‘특권적 인준안’(privileged nominations)은 그동안 인준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적이 없거나 본회의에서 인준안에 대한 개별토론이 거의 없었던 공직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결의안의 내용은 상원의 의사규칙에 포함되었고, 2011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인준안 필리버스터에 대한 토론종결동의 요건 완화

상원의 인사청문절차와 관련된 최근의 개혁은 제113대 의회(2013년)에서 이뤄졌다. 상원은 본회의에서 인준안 처리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 인준안에 대해서는 토론종결동의(cloture)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했다. 일반 의안에 대한 토론종결동의가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60인)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인준안에 대해서는 ‘표결의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토론종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의결정족수 완화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의 특징적 제도인 본회의 무제한토론제도, 일명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는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원의원은 본회의에서 원하는 만큼 장시간 발언이 가능하다. 공직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본회의에서 인준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토론종결동의인데, 인준안에 대한 토론종결동의의 의결정족수가 완화됨으로써 상원의원이 인준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 것이다. 처음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2013년에는 토론종결 의결정족수 완화대상에서 대법관 인준안을 제외했지만, 2017년 4월부터는 대법관 인준안도 표결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토론종결이 가능해졌다.²⁾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 상원의 제도개혁 큰 방향은 인사청문 대상공직의 축소, 후보자 검증절차의 간소화, 인준안 심사를 위한 신속절차의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래 걸려서 유능한 공직후보자의 공직진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이 같은 제도개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능한 공직후보자들이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두려워서 공직을 고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만,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는 제도개혁 방향은 미국과는 상반된다. 인사청문 대상공직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인사청문 기간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없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의사규칙이 상원의 청문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사례를 우리 국회와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200년 넘게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해온 미국 국회의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은 20여 년 정도의 제도운영 경험을 가진 우리 국회의 고민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인사청문제도의 개혁 방향을 논의할 때 미국의 사례가 주는 함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Valerie Heitshusen, "Senate Proceedings Establishing Majority Cloture for Supreme Court Nominations: In Brief", CRS Report, 2017

엄중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 모아야

우리나라 외교와 남북관계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통일위원회는 소관부처로 외교부와 통일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가 있고 산하기관에 재외동포재단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이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상임위의 중요도만큼이나 위원회 위원들의 면면 또한 국회부의장이나 당 대표를 역임한 다선의 중진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어 흔히 ‘상원’으로 불린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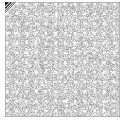
지난 3월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윤상현 위원장은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엄중한 대외환경 변화의 시기”를 강조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 정착,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견실한 관계는 물론이고 중국, 인도 및 아세안 국가와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시대를 맞아 ‘국익’이라는 외교과제를 풀 생각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우리의 국익과 의지에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우려와 함께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며 “외교정책이 ‘엄중한 대외환경 변화’를 맞고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자세를 견지해 위원회가 ‘지혜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외교는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정치적 성향이 아닌 전문 외교관들의 집단 지혜와 축적된 경험으로 올바른 외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Q. 최근 남북·북미 관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시요.

A.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미국 백악관에 가서 이것을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의지’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증을 썼지요. 그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년 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핵무



기 6개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추가로 생산해냈어요. 그뿐인가요? 지난 4월 17일과 5월 4일 그리고 5월 9 일에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탄도미사 일은 연료주입시간이 필요 없는 고체연료를 사용합니 다.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자신 이 정한 시간에 발사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 까요? 더구나 여기에 핵탄두와 EMP(Electro Magnetic Pulse: 전자기파)탄이 탑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토 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金正은 이 탄도미사일 발 사로 도발을 재개함으로써 자신에게 그런 능력과 의지 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과시했어요. 우리의 오판은 북한 의 오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Q.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를 분리해서 대처할 수는 없나요.

A. 남북 관계와 북한 핵 폐기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북 핵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 까?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행동, 즉 북한 비핵 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지 않는 한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북한 비 핵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지구적 문제이고 국제 안보의 핵심 문제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말 엄중한 상황입니다.

Q.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가 협상을 오히려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요.

A.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 회담에서 미국이 마련했던 공동선언 초안에는 북한 비 핵화 목록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종전선언, 연락사무 소 설치, 대북 경제지원 계획 등金正은 원하는 것들 이 다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의사가 전혀 없이 오

로지 대북 제재 완전 해제만 요구했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말미 아닌 행동으로 확인해야 합 니다. 현재의 대북 제재망에도 구멍이 많아요. 미국 재 무부가 올해 불법 해상 거래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발표 한 리스트만도 북한 선박 28척, 외국 유조선 18척, 북한 과 외국의 화물선 49척 등 총 95척에 달합니다. 이런 해 상 불법 환적을 통해서 북한 석탄이 수출되고 유류가 북한에 들어가고 있어요. 북·중 국경을 통해서도 들고 나고 있고요. 이뿐이 아니에요.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 (TEL)도 들어갔어요. 따라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과정에 이를 때까지 이런 열려있는 뒷길을 막고 제재를 더욱 견고하고 강력하게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Q. 한·일 관계를 역사상 최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지혜는 없을까요.

A. 한국과 일본은 경제에서 서로 의존하는 이웃이고, 안보 에서 서로 협력하는 이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연대하는 이웃입니다. 지금 미·일 관계는 물론이고 중·일 관계도 밀월입니다. 한·일 관계도 빨리 회복 되어야 합니다.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야말로 아 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토대입니다. 한·일 양국 관계를 북한문제나 역사문제에만 가두지 말 아야 합니다. 두 나라는 함께 지향하고 협력해야 할 많 은 비전이 있어요.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를 위해서는 양국 정상 간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한 만 큼 오는 6월 말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그간의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면적 협력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 래를 열어나가려면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합니 다. 양국 지도자들이 손을 맞잡고 갈등의 에너지를 미래 를 개척하는 힘으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글: 김종해

천혜의 명산 도봉산 품은 행복타운 도봉

김선동 의원

자유한국당, 서울 도봉구을

봄이 물러나고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立夏)가 지나고, 산과 들에 신록의 초록색이 진해지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휴양을 즐겼다는 도봉산에도 싱그러운 초여름 기운이 물씬 풍긴다. 우람한 기암괴석과 뽕죽이 솟은 봉우리들이 장관을 이루고, 봉우리들 사이로 수려한 계곡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도심 속의 산, 도봉산이 위치한 서울 도봉구에서 김선동 의원을 만났다.



김선동 의원은 도봉산을 두고 “인천공항에서 차로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소개했다. 도봉산의 최고봉은 해발 740m의 자운봉이다. 자운봉에 오르면 만장봉, 오봉능선, 칼바위, 포대봉, 우이암 등이 한눈에 보이고 멀리 북한산까지 눈에 담을 수 있다. 김선동 의원은 “도봉산과 북한산을 아우르는 ‘북한산국립공원’은 연평균 탐방객이 1천만 명에 이르고 있어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소개했다.

김선동 의원은 도봉구 도봉산길에 위치한 ‘북한산 생태탐방원’을 찾았다. 이곳은 등산객들을 위한 생태관광, 환경교육, 전문가교육, 산악안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생태탐방원은 개원에정인 내장산을 포함해 설악산, 북한산, 소백산, 지리산 등 전국에 8곳이 있다. 그는 “국립공원 내에 무조건 건물을 헐어내기보다 건물을 지어 자연을 제대로 이용해 보자는 역발상으로 시도한 최초의 사업이 이곳 북한산 생태탐방원”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북한산 생태탐방원에서는 브런치를 먹으며 여유로운 감성여행을 즐기는 ‘브런치 생태여행’, 새들을 위한 등지상자를 만들어주는 등 계절별로 자연보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쉬어가는 생태발걸음’, 청소년 자연캠ป์, 청소년 진로체험, 청소년 에코 등산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생태탐방원 옥상에 위치한 ‘하늘정원’에서는 도봉산이 한





북한산 생태탐방원 옥상에 위치한 '하늘정원'에서



북한산 생태탐방원 건물



주민과 함께

눈에 들어오는 비경을 볼 수 있다. 생태탐방원 바로 옆에 위치한 산악박물관은 과거 산악인들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며 사용했던 장비 200여 점을 전시해 갈 길 바쁜 등산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김선동 의원은 “공약이었던 ‘도봉산 프로젝트’를 이미 실천 중”이라며 “이미 국가예산 5억 원으로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480억 원 규모의 ‘산악안전교육원’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선동 의원은 방학역으로 향하면서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학역·도봉역에는 지난 3월 15인승 엘리베이터 7대를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돼 올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방학역·도봉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사업도 ‘지역 주민의 생활을 바꾸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현장에 정말 여러 번 와서 살펴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은 물론 유모차를 끌고서 지하철 타기 쉽지 않습니다. 간단치 않았던 예산 확보와 공사가 어려운 건물 구조 등 난관을 뚫고 3년여 간의 노력 끝에 성사시킨 이번 사업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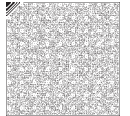
김선동 의원은 그 밖에도 교육환경 개선에 꾸준히 관심

을 갖고, 교육 예산을 확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초여름 더위가 찾아온 북서울중에서 그는 “이곳 운동장을 비롯해 도봉중 교실, 신방학초 체육관 시설, 누원고 옥상 등을 개선하고 도봉구 전역 23개 학교 주변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했다”고 소개했다.

“‘교육이 미래’라는 생각으로 도봉의 교육을 바꾸려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교육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먼저 학교 시설부터 깨끗하게 바꾸자고 생각했지요. 5개 학교에 체육관을 세우고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한편 과학중점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유치에 노력하는 등 교육 분야에 특히 정성을 쏟았습니다.”

도시생활의 녹색쉼터 ‘발바닥 공원’

김선동 의원은 이어 ‘발바닥 공원’으로 향했다. 방학천을 따라 조성된 ‘발바닥 공원’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다. 방학천에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비가 오면 심한 악취가 났으나 2002년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평소 하찮게 여겨지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바닥처럼 예전의 열악한 환경을 바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발바닥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었



다고 한다.

‘발바닥 공원’의 생태연못 주위로 난 작은 산책로에는 야생초가 여기저기 피어 있다. 주민들의 휴식처뿐 아니라 나비, 소금쟁이, 방아깨비 등을 볼 수 있어 아이들의 자연 학습장으로도 인기가 높다. 때 이른 더위를 피해 정자 밑에 앉아 장기를 두고 있던 어르신들이 김선동 의원을 보고 인사를 건넸다.

김선동 의원은 “어르신이 많은 ‘발바닥 공원’에 뜨거운 여름 낮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급수대를 설치했고 정자를 2개 동으로 확장했다. 보행자 통로가 일방통행이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부딪치는 등 불편해 보행자 통로를 양방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봉 주민들의 생활을 바꾸기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펴 하나하나 고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도봉산 입구 ‘디자인거리’ 개선, 버스중앙차로 설치로 없어졌던 방학북부역 신설 사업 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다”

제18대국회의원에 이어 재선 의원인 김선동 의원은 제20대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시당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차례로 맡았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공천혁신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와 당에서 주요 보직을 여러 개 맡아 ‘검직대왕’이라 불린다는 그는 의정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의외의 답을 내놓았다. “지역에서나 국회에서나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진심으로 다가가려 한다”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도봉 발전만 생각하고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총선에서는 출신 정당을 ‘도봉당’이라고 했다”면서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크고 작은 사업을 통해 도봉의 지도를 바꾸고, 도봉의 생활과 교육을 바꿔 도봉의 미래를 바꾸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 박민선 사진. 유윤기



발바닥공원

“내실 있는 복지 위해 중장기 비전 세워야”



전혜숙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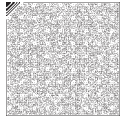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지난달 국회보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이었던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다음 주자로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을 선정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명수 의원에게 대해 “행정 전문가로서 예리한 판단력과 유연함을 함께 가지고 계신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쟁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수 위원장 덕분에 원만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여야 위원 모두에 대한 존중과 포용이 빛나는 인품의 소유자”라고 칭찬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에 대해 “제 개인보다는 열심히 해주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나눌 칭찬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1978년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산군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친 이명수 의원은 제18대국회에 입성한 후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배운 ‘행정의 모든 시작과 귀결은 주민’이란 점을 국회에 와서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명수 의원은 국민들의 살아 있는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을 대표하는 보수 중진 의원으로 자리 잡은 이명수 의원은 지역구인 아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내비쳤다. 그는 아산에 대해 “전통과 현대가 융·복합된 지역”이라며 “은양온천, 이순신의 생가와 사당을 모신 현충사가 있으면서 동시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전통문화와 첨단산업이 함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보편적 복지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에 중점 뒤야”

제20대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이명수 의원은 복지정책의 중장기 비전 정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단기 현안 사업이 아닌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선별적 복지에 중점을 뒤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올해 복지에산은 보건·복지·고용까지 포함해 160조

원이 넘습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 됐음에도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양적 팽창은 했지만 질적 관리는 부족한 거죠. 중증장애인, 절대빈곤층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지난 제19대국회에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희귀질환 관리법’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그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라며 “생존에 필요한 약을 해외에서 구해 와야 하는 경우가 많고, 확진을 받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담당 부서가 생겨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가능해졌고 지원 대책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며 “35만 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돼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



맹성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명수 의원은 다음 칭찬 주자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활동 중인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을 선정했다. 맹성규 의원은 1988년 공직에 입문해 30년간 대중교통·교통물류 분야를 두루 거친 전문 관료 출신이다. 이명수 의원은 맹 의원에 대해 “오랜 공직생활로 쌓은 전문성과 밀도 있는 업무추진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전체를 보는 균형감각도 함께 갖추신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맹성규 의원은 충남 아산의 역사적 위인이자 조선의 청백리 중 한 명인 맹사성 선생의 후손이십니다. 그래서인지 맹사성 선생을 그대로 보는 듯, 똑 부러진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업무의 전문성, 균형감각, 애국심 그리고 의원들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화력까지 갖춘,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글. 서기정 사진. 김진원

수선화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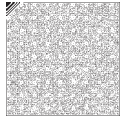
정 호 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 호 승

1950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났다. 경희대 국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일보, 대한일보,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문단에 데뷔했다. 시집으로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새벽편지'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를 펴냈다. 소월시문학상, 동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편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외로움은 벗이자 침잠의 시간



김종희 의원
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국회보를 통해 평소에 좋아하는 시를 함께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여유를 내어 시 한 편을 감상해보고자 한다.

추천 시는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성리학을 연구해온 유학자다. 유학의 목표인 수기치인(修己治人:자신을 수양한 후에 남을 교화해야 함을 이르는 말)을 실현하기 위해 가문 대대로 이어온 학성강당을 운영하며 무상교육을 실천했고, 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학생들을 지도해왔다. 이러한 교육적 방법을 통해 정치, 경제, 법조, 의료계 등 각계각층에 7천여 명의 국가 인재를 양성했다.

그러나 교육적 방법만으로는 세상을 크게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 근본적으로 국가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실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치에 입문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당내 경선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 몫이었다.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준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송구함이 컸다.

이러한 갈등과 번민에 사무쳐 괴로워하고 있을 즈음,

저는 해탈을 위해 1년 동안 전국의 명산을 돌며 수양을 했다. 그때 우연히 접한 시가 바로 ‘수선화에게’다. 당시 제 상황에 가장 큰 위로가 된 시였다. “외로우니까 사람이 다”, 이 한마디가 이 시의 핵심 구절이다. 어느 누구도 인생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크든, 작든, 시대와 지역, 성별, 세대를 막론하고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다.

외로움은 인간 보편의 감정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갖는 외로움이라면 우리는 결국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간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는 구절 역시 남 탓 하지 말고, 환경에 구속받지 말고, 뚜벅뚜벅 목표를 향해 걸어가되 초심을 잃지 말고 지나온 길을 반추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외로움은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친구 같은 존재다. 여러분도 ‘외로움’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 의기소침하지 말고 오히려 본인을 위로하고 내면을 강인하게 만드는 자신만의 시간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한다. 🍵

노동자가 중심인 나라를 꿈꾸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육아휴직제도와 주5일 근무제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노동운동가. 40년을 노동운동에 헌신한 이용득 의원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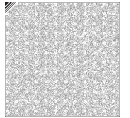
잠깐 하려던 노동운동, 40년 할 줄 몰라

경북 안동 가난한 농가의 10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이용득 의원은 당시 모두가 곤궁했던 시절이라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이 의원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선생님이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장학생 전형을 권했고 이후 이 의원은 중학교 3년 동안 장학생으로 학업을 이어갔다.

“그 선생님은 제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게 매일 1원을 주시며 남산시립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얼른 독후감을 쓰고 나머지 시간에는 무협지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용득 의원은 그후 장학생으로 경성고에 진학했지만 독일어 점수가 낮아 장학생 자격을 잃은 뒤 공부를 포기하고 공장에 다니다 덕수상고 야간부에 진학했다.

“은행이 월급을 많이 준다길래 은행에 취직하기 좋다는 학교를 선택했지요. 그런데 3학년이 되자 제가 나이가 많아 만 20세 미만 은행 취직 시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낙심해 1년 내내 전국으로 무전여행을 다녔어요. 이때의 경험을 통해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배포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에 취업한 이용득 의원은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다니다 29세 때인 1982년 대졸과 고졸 간 호봉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되면서 노동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당시 고졸 출신 후배들이 저를 잘 따랐어요. 저는 그때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고졸자와 대졸자 간 호봉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사 측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울의 한 출장소로 부당발령이 났습니다. 그곳은 야간대학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야근이 많고 집과의 거리도 먼 곳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해고되지 않기 위해, 다니던 야간대학을 계속 다니기 위해 노조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지요. 큰 뜻이 있어 노동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부당전보 발령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노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한 1년만 상근 노조활동을 하려 한 이용득 의원은 이후 40년을 노동운동에 몸을 바쳤다. 상업은행 노조 위원장, 금융노련 위원장,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을 거쳐 세 차례의 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예순 살 넘어까지 노동운동을 이어갔다. 상업은행 노조 시절, 국내 최초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1984년)해 당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금융노조 위원장 시절에는 IMF의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두 차례의 파업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국노총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전태일 노동자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 일로 두 차례 투옥돼 1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2002년에는 ‘주5일 근무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일반기업으로 확산시키는 등 현장에서 실천운동가의 삶을 살아왔다. 이후 이용득 의원은 민주통합당으로의 야권대통합 과정에 합류, 제20대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동자 권익 대변할 노동회의소 설립해야

한국노총 위원장 시절 이용득 의원은 2006년 ‘금강산 H노총 이름찾기’ 사건을 벌였다. 당시 금강산에 들어가는 단체 명칭에 ‘한국’이나 ‘대한’이란 단어를 쓸 수 없었는데, 이용득 의원이 북한 입국사증 같은 관광증에 적힌 ‘H노총’을 펜으로 긋고 ‘한국노총’이라 고쳐 써 북한군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북한의 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의 중재로 겨우 종결됐고 이후 1년 뒤 금강산을 방문하는 모든 단체는 ‘한국’, ‘대한’이란 명칭을 쓸 수 있게 됐다.

이용득 의원은 “우리가 스스로 제 이름을 찾고 쟁취해야 한다. 안 된다고 주저앉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고 소리쳐야 한다.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다. 저는 2004년부터 한국형 중앙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문제는 노사가 중심이 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노사관계 구축이 필수적이어서 저는 노동회의소 설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용득 의원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할 제도인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직화된 노동조합은 가입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활동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10%의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넘어서는 노동운동이 이제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인 노동회의소가 반드시 설립돼야 합니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노동의 진정한 자주성과 사용자의 진정한 자주성이 있어야 우리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글. 고영선 사진. 유윤기

GTX-B노선·화폐개혁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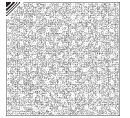
안규백·윤관석·김경협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5월 7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GTX-B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용수요가 지난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당시 예측한 것보다 4배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남양주시 마석을 잇는 GTX-B노선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정과 제로 채택된 GTX 3개 노선 중 하나다. 작년 12월 착공한 GTX-A노선(화성동탄~파주운정)과 예타를 통과한 GTX-C노선(양주~수원)에 비해 진행이 더딘 GTX-B노선은 아직 예타 과정 중에 있다.

김진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첨단철도기술기획실장은 “한국의 직장인 출퇴근시간은 OECD 1위로, 특히 인천·경기 지역에서 서울간의 출퇴근 문제가 심각해, 삶의 만족도 저하의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수도권 동남북을 연결하는 GTX-A, 동서를 연결하는 GTX-B, 서남북을 연결하는 GTX-C노선의 ‘동시구축’을 통해 수도권 동서남북의 교통연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역시 신도시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 철도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3기 신도시의 ‘선교통 후개발’이란 방침은 바람직하다. 다만, 1·2기 신도시와 수도권의 균형적 발전이란 측면에서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예타 추정 현황발표를 통해 “GTX-B노선 이용수요는 당초 1일 8만 명이었지만, 1일 32만 명으로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TX-A노선 건설과 경춘선 구간 직결 운행으로 전철 접근성이 개선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용수요가 증가하면 경제성 지표(비용 대 편익)도 당초 0.33에서 1.1 안팎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예타에서 비용 대 편익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 협상쟁점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의 전망은?’ 토론회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홍일표·한정에 의원)은 5월 9일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 협상쟁점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의 전망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국제 협상동향을 살펴본 후 향후 기후협상을 위한 전략과 온실가스 감축분의 방향을 모색했다.

파리협정 제6조인 시장메커니즘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가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2018년 COP24(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을 마련했지만, 시장메커니즘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오는 6월 기후변화회의에서 재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지난 COP24에서 시장메커니즘 자체는 물론 거래방식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채택이 어려웠다”면서 “한국의 역할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호 양해가 가능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은 “파리협정 이행을 두고 한국도 2030 로드맵 등을 수립했으나, 수치만 개괄적으로 제정됐을 뿐 ‘누가, 어떻게’ 감축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미흡하다”며 “협상 과정에서 각국이 국익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범지구적 기후변화 안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위원은 각국이 제출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다양성에 따른 시장지침 개발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시장지침 마련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의 기술적 사항보다는 수익금 배분·최저기준 설정 등 정치적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

이원욱·최운열·심기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명재·김종석 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은 5월 13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리디노미네이션(Redomination : 화폐단위 변경)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약 10년의 장기과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공론화 및 제도 준비 기간이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포함해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며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면밀한 논의와 사전준비로 부작용을 줄이는 게 전제조건”이라면서 “카페에서 5천 원의 커피를 5.0으로 표기하는 등 이미 리디노미네이션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저물가 상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요인이고,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시 단기적 경제성장률 제고와 중장기적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재분배 효과로 협상력이 낮은 경제주체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자산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회피행위에 따른 혼란이 생기고, 고액권 발행으로 검은돈 유통이 증가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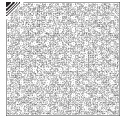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

김상희·남인순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5월 15일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의료원의 간호사가 지난해와 올해 초 ‘직장 내 괴롭힘(태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병원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야기된 사건임을 지적하고, 병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동희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고(故) 박선옥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사망을 산재 승인한 것은 병원의 구조문제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음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업무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주와 동료 등에 대한 적극적 조사가 부족했다”고 한계점을 꼬집었다. 특히 인력충원, 업무시간 준수, 연장수당 지급 등 근무환경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문의 역시 “구조적 환경이 대인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단순한 대인 간 문제가 아닌 ‘병원의 구조적 태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두 병원 모두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은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여전히 현장의 변화와 예방노력이 이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서울의료원 간호사는 “여전히 신규 간호사가 과중한 업무로 1년을 못 버티고 대거 사직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공급확대를 외치고 있다”면서 “이는 열악한 근무조건은 유지하고 신규 및 유휴 간호사로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의미다. 간호사를 부품처럼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정세균·안민석·신동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5월 27일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감독·감시 활동만 가능한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단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 온라인 도박 공급자에 대해 무관용의 엄격한 형사제재를 부과하고, 그들이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범죄는 형벌의 상한보다 그들이 받을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범죄억제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불법도박 양형기준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게 4년의 징역형이고 나머지의 경우 거의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내의 징역형”이라며 처벌이 약하다고 부연했다.

홍완희 대구지검 형사3부 검사 역시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엄청난 범죄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선고 형량이 높지 않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불법도박 사범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범죄수익이 범죄로 인한 불이익보다 클 경우,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감위에 따르면, 2007년 53조 7천28억 원이던 불법도박 매출규모는 2011년 75조 1천474억 원, 2015년 83조 7천82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조성제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사감위 조직·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불법사행산업 근절정책의 총괄 조정기구가 필요하며, 사감위가 적합하다”면서 “(사감위의) 단순 감시와 정보수집활동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글: 서기정

형집행법 개정으로 교정행정 및 수용자 처우의 획기적 개선기반 마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 통과되었다. 형집행법은 ‘행형법’이란 법률 명칭으로 1950년 제정되어 2007년 전부개정으로 지금과 같은 명칭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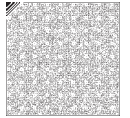
그런데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교정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되었다. 즉,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지나친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해 위헌결정을 내렸다.¹⁾ 현재 전국 52개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약 4만8천 명인데 5만4천 명이 수용되어 13%의 인원이 과밀상태로서 수용률이 OECD 평균보다 20%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크고 작은 교정사고와 인권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번 형집행법 개정은 수용자의 처우 개선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기반을 마련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형집행법 개정으로 교정정책의 선진화 기틀 마련

첫째, 교정행정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즉,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용자의 처우 등 형집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검찰·경찰·법원 등 교정관련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법무부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가 복잡화됨에 따라 습관성·중독성 범죄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장기적·거시적인 교정정책이 요구된다. 교정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계획 수립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인 비

1)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42 결정).



법사위 직원들이 민영교도소인 여주 소망교도소를 둘러본 후 교정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정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법무부 장관에게 적정한 교정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교정행정은 수용자의 교화개선에 중점을 두고 장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교도관은 수용자 계호·교화·작업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는 구금확보 및 질서유지이다. 수용자의 수가 많아지면 계호업무에 투입되는 교도관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교화 분야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적정한 교정인력 확보의무를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교정정책의 추진이 기대된다.

셋째, 수용자 접견의 원칙을 법률에 마련했다. 현행은 대통령령에서 접견의 원칙을 정하고 법률에서 예외를 정하고 있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또한 남성수용자가 미성년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접견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근거로 차별이 있었다.

법률에서 접견의 원칙과 예외를 모두 규정해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교정환경에 따른 유연한 운영을 도모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남성수용자도 가족관계를 유지·회복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

복귀’라는 교정의 본래 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정시설의 미허가촬영 및 무인비행장치·정보통신기기 반입의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반입해 교정시설 내부를 촬영해 보안을 해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교정시설은 국가중요시설로서 내부 구조가 드러나는 경우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원치 않는 촬영은 인권침해 문제도 야기한다. 초소형 카메라 또는 드론 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촬영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엄정한 교정행정의 집행기반을 마련했다.

오늘날 교정행정에서 수용자 인권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데, 이는 옛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형벌서 ‘흠휼신서’에서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고, 형을 다스리는 근본은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라 했다. 이번 형집행법 개정은 따뜻하면서도 엄정한 교정행정으로 ‘흠휼신서’에 담긴 다산 선생의 인권존중 정신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과제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이를 조력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69조제1항(자기낙태죄)과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낙태와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형법’ 제27장에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면서(제14조), 이에 대해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및 업무상동의낙태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제28조).

과거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입장을 변경해 결정가능기간¹⁾ 중의 낙태에 대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자기낙태죄와 같이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르자면 국회는 2020년 말까지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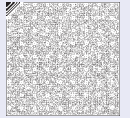
이용준 법제실장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총 9건의 관련 법률안 입안 의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법제실에는 ‘형법’ 개정안 4건,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 ‘의료법’ 개정안 2건, ‘약사법’ 개정안 1건 등 총 9건의 관련 법률안 입안이 의뢰됐다.²⁾

1) ‘결정가능기간’이란 착상 시부터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 2019년 5월 20일 기준



이와는 별도로 이정미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³⁾ 이 법률안은 현행 ‘형법’에서 자기낙태죄, 동의 낙태죄 및 업무상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에 이를 규정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임신의 유지 및 종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임신 14주 이전에는 임신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신 1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포함하는 적응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임신 22주가 초과하는 때에는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했다.

현재 발의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이원적인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구성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낙태에 관한 현행 법체계를 ‘형법’이나 ‘모자보건법’ 가운데 하나로 통합·정비해 나갈 수도 있다.

둘째,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낙태허용 한계시점을 임신 2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법률에 적정한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결정가능기간 내에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한다면, 그 사유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미성년자의 임신, 비혼 임신 등 임신한 여성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결정가능기간 내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그 사유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낙태와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의 의미, 과정, 결과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와의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의료인 등의 양심에 따른 낙태수술 거부권을 명문화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낙태 허용에 따라 관련 사회적·제도적 환경 개선에 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결정가능기간 이후의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입양과 상담 지원, 출산·육아에 대한 복지 강화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낙태에 대한 새로운 법·제도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시되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균형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

3) 동 의원실로부터 지난 2017년 11월에 의뢰받은 내용에 대해 법제실이 송부한 법률안에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일부 수정·반영한 내용이다.

미국 연방의회의 힘

- 왕성한 위원회(Committee) 활동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외교의 중심인 워싱턴 DC의 중심부에는 캐피톨 힐(Capitol Hill)이라고 불리는 언덕 위에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이 있다. 특히 워싱턴 DC는 연방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연방의회 의사당보다 높은 건물은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건축규제가 있을 만큼 연방의회는 미국 내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의회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연방의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힘은 바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는 연방의회 위원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대부분의 활동을 위원회가 주도하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우드로 윌슨 전 미국 대통령은 저서에서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있을 때가 공공전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을 때야말로 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하면서 “의회 정부는 위원회 정부(Committee government)”라고 표현한 바 있다.

상·하원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를 기준으로 상원에는 16개, 하원에는 20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위원회는 입법 및 정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위원회는 수없이 많이 발의되는 법률안과 결의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문지기 역할(gate-keeping)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각종 청문회와 자료 요구권을 통해 강력한 대 행정부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김영일 워싱턴 주재관

각종 청문회와 소위원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위원회는 회부된 법안의 통과 여부를 심사하는 첫 번째 관문으로서 청문회, 축소심사회의 등을 개최한다. 이러한 여러 과정 중에 위원회가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제도는 청문회(hearing) 제도다.

청문회는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안 심사를 위한 각종 입법정보와 의견을 듣는 입법청문회(legislative hearing), 행정부의 정책집행



등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청문회(oversight hearing), 특별한 비리 및 부패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청문회(investigative hearing),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직 인사의 공직 적합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준청문회(confirmation hearing)가 있다.

북핵문제 등의 이슈를 다뤄 우리나라에게 익숙한 하원 외무위원회(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의 사례를 보면, 제116대국회가 개원한 2019년 1월부터 5월 16일까지 총 35건의 청문회가 개최됐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35건의 청문회 중 22건은 소위원회(subcommittee) 주관으로 열렸다는 점이다. 하원 외무위원회는 지역별, 기능별로 우리에게 익숙한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 등 6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연방의회의 경우 ‘소위원회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subcommittee)’로 불릴 만큼 소위원회의 활동이 왕성하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도 최근 ‘일하는 국회’의 제도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2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소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등 기존 안전심사 소위원회 외에 지역별 소위원회(미주소위, 신북방소위, 신남방소위, 유럽·아프리카소위)를 신설하는 등 소위원회를 통한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위원회의 홍보기능 강화 필요

미국 연방의회의 위원회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선 위원회는 특성에 맞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그 활동에 대

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다. 위원회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하원 외무위원회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 14일 까지 총 125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는 이메일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특히 누구나 외무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의 이메일을 등록해놓으면 보도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청문회 메뉴가 따로 있어서 일정별로 정리된 청문회를 클릭하면 청문회 전체영상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또는 유튜브 채널에 연결해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외무위원회는 자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2~3명의 공보담당관(communication specialist)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 국회도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위원회별로 공보담당관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회에 주는 시사점

우리 국회는 미국 연방의회와 같이 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고, 행정부 각 부처에 대응하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등 위원회 시스템과 권한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의회와 비교해 볼 때 그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다. 청문회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며, 국민과 보다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홍보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등 일련의 개혁방안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활발히 한다면 ‘일하는 국회’를 국민에게 알려 신뢰받는 국회로 국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법’

(시행 2017. 5. 30.)

그동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인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전체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6.2%, 장애인 학습자 비율은 0.02%에 불과하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수 27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장애인의 0.13%만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추진 근거와 책임을 강화해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2017년 5월 30일 시행됐다. ‘평생교육법’ 시행에 따라 충남 아산시에 설립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찾아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보완점 등을 알아봤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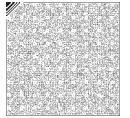
‘평생교육법’ 시행 이후 1년 뒤인 2018년 5월 28일 문을 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부 직속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된 기관이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연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공무원 및 평생교육인력에 대한 교육,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현

장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노선옥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장은 ‘평생교육법’의 개정과 시행에 대해 “다른 법들도 모두 중요하겠지만 ‘평생교육법’ 개정은 장애인들의 숙원이자 열망 그 자체였다. 법 개정은 장애인들이 수십 년간 소리 높여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유정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교육연구관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센터장인 장학관 1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정원으로 일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법제화되고 센터가 설치된 지 불과 1년 남짓한 상황이라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지만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평생교육법’으로 일원화하고 평생교육의 의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포함됨을 분명히 했다.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



충남 아산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개소식

하기 위한 총괄 기구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어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하면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선옥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배움은 누구나 즐거운 것이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장애가 있다고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들도 문화와 예술, 취미 생활을 배우고 즐기고 싶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장애인들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현장의 교육은 아직 1970~80년대 산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오유정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교육연구관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데 예산과 인력 등 여러 이유로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요구에 더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임시로 교사 2명을 파견 받아 운영 중이지만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복지국가

한편 지난 4월 5일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고 평생교육 종사자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에 따르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 인력의 교육을 담당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관은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운영하게 된다.

노선옥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장은 “이러한 법 개정 상황을 보면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장애인들의 기대와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새삼 알 수 있다. 우리 센터가 그 기대와 간절함을 하루아침에 다 해소해주고 싶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밖에 나아갈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시릴 때가 많다.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복지국가다. 제 소원은 우리 센터가 없어도 될 만큼 장애인 지원이 잘되는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늘 깨어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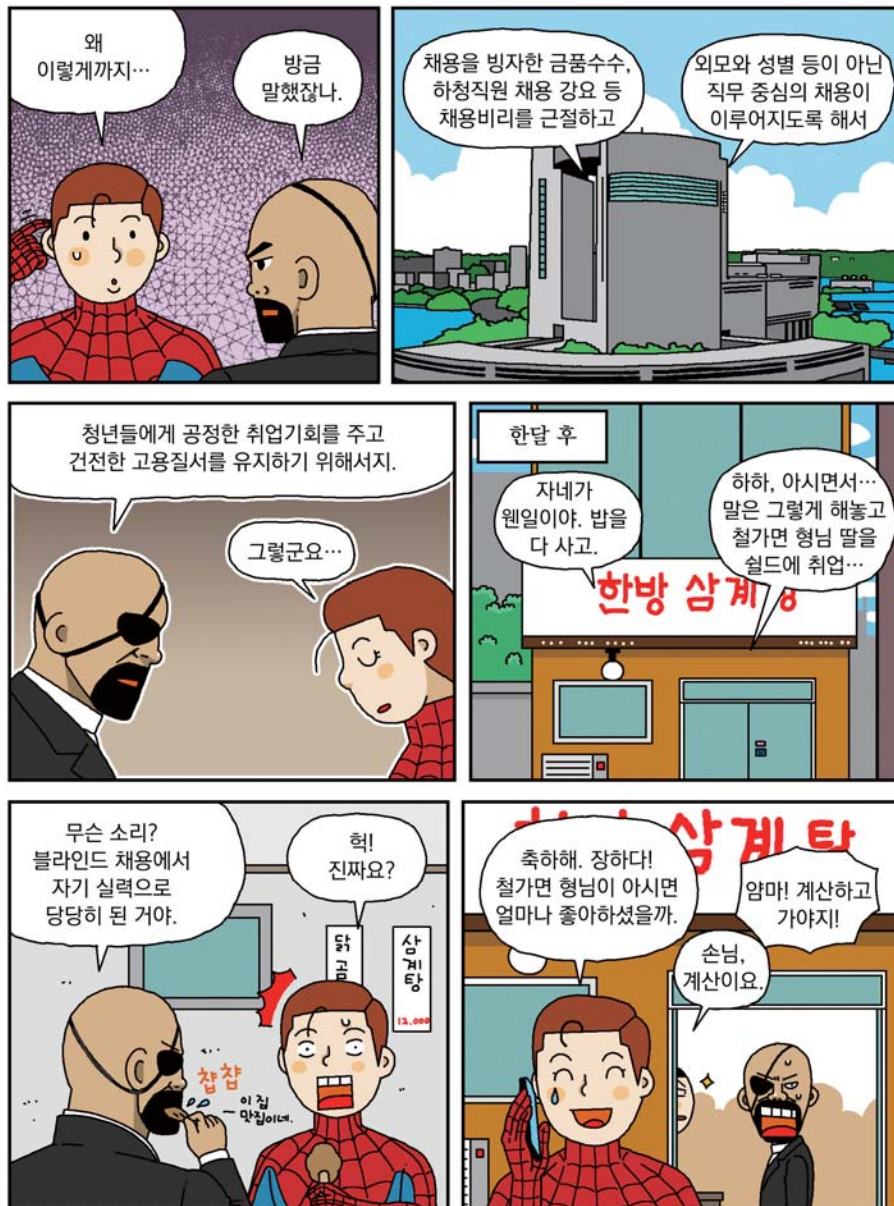
충남 아산 / 글. 고영선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절차가 공정해집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6년 11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2019년 3월 28일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NEWS

2019 JUNE

문희상 국회의장, 의회외교 중점 혁신과제 중진 의원 중심으로 한 '의회외교포럼' 출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적극 추진 중인 '의회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별·지역별 '의회외교포럼'이 본격 가동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2일 '국회위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서명해,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회외교포럼은 12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 각 포럼 회장을 부탁했다. 이에 미국 정세균 의원, 일본 서청원 의원, 중국 박병석·원유철 의원(공동), 러시아 추미애 의원 등이 주요 4개국 회장을 맡고, 5월부터 차례로 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회외교활동을 진행한다.

정세균 의원이 단장을 맡은 한미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은 5월 19일부터 4박 6일간 미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미 국무부 주요 인사,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외교안보분야 의원 등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국회는 의회외교포럼을 활용해 EU(유럽연합),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의회외교활동을 적극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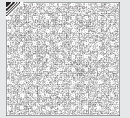
<의회외교포럼 구성>

회장	정당	담당국	선수
서청원	무소속	일본	8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북한	7
김무성	자유한국당	중남미	6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아세안(공동)	6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미국	6
천정배	민주평화당	중동(공동)	6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중국(공동)	5
심재철	자유한국당	아세안(공동)	5
원유철	자유한국당	중국(공동)	5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인도+인도양권	5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EU(유럽연합)	5
이주영	자유한국당	아프리카	5
정갑윤	자유한국당	중동(공동)	5
정병국	바른미래당	영국+영연방	5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5

문희상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 공관 초청 만찬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4일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전직 국회의장들을 초청해 만찬회동을 가졌다. 이날 만찬회동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직 의장들에게 정국 정상화에 대한 조언



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상황과 관련 “결국 정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정치를 어떻게 복원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지혜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직 의장들은 정국 복원 방안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장단과의 만남 등 다양한 대화 채널 가동을 제안했다. 또, 현재의 국회 기능과 위상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며, 권력구조 개편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전직 의장들은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한목소리로 개탄하고, 국회 법안심사의 내실화 및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만찬회동에는 박관용(16대 후반기), 김원기(17대 전반기), 임채정(17대 후반기), 김형오(18대 전반기), 정세균(20대 전반기) 전직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화쟁의 정신이 필요한 때” 강조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13일 국회 사랑재에서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인 초월회 모임을 가지고, 대립과 논쟁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화쟁’(和靜)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원효대사가 ‘화쟁’이란 화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유사한 개념이다. 의견이 다른 사람이 모여도 화합하라는 취지”라며 “우리 국회, 대한민국에 이 말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4당 대표에게 “진정 어린 화합과 통합, 역사사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으면 한다”면서 “허심탄회하게 국회 활성화와 민심대책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한 “급박한 한반도 상황과 절박한 민생 현장에 대해 국회가 답을 못 내면, 많은 분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가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 기초과학 토대 튼튼해야 성과 배기될 것”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15일 오후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19’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라면서 “이는 산업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결국 과학기술의 혁명”이라며 “과학기술의 혁신은 기초과학이란 기본토대가 튼튼해야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녹록지 않은 한국의 기초과학 분야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미래가 담보되지 않은 기초과학 생태계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처우의 문제는 연구력 저하와 인재 이탈을 가져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다시 기초과학이다: 대한민국 혁신성장 플랫폼’을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정치인, 경제전문가들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국가정보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정보포럼 설립 기념 세미나’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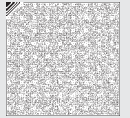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며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환골탈태를 위해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가정보원이 출범하며 ‘정보는 국력이다’를 원훈으로 정했다. 이는 정보기관의 위상을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명확하게 강조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남북 관계와 미·중·일·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에게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혁명적인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없다”면서 “정보의 생산, 정보의 관리, 정보의 공급 등 국가정보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국가정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세미나가 국가정보 정책에 대한 건설적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도 역할을 모색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정보화시대 국회와 정보기관’이라는 주제로 국가정보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문희상 국회의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서 열린 추도식에서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노무현’을 찾으려



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 걷고 있다”며 “노무현이 걸었던 그 길은 국민통합의 여정이었다. 당신의 정치는 국민통합에서 시작되었다.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의 당선은 그 자체로 지역주의 해소의 상징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문화상 국회의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했던 세 가지 국정목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언급하며, 이를 향해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끝으로 문화상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계시지 않는 봉하의 봄은 서글픈 봄, 사무치는 그리움의 5월”이라며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라고 추도사를 마쳤다.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

문화상 국회의장은 5월 24일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서청원 의원을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하고 ‘외교입국(外交立國)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



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상 국회의장은 “온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경쟁을 하는 시대”라면서 “정부에만 외교를 맡기지 않고 의회외교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가 한일 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회외교포럼은 문화상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의 기본 틀로서, 한·일 의회외교포럼의 경우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문화상 국회의장이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화상 국회의장은 직접 한·일 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을 맡아 대 일본 의회외교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여야를 초월해 대 일본 의회외교 책임자로 15명 안팎의 의원들도 내정했다. 한·일 의회외교포럼은 5월 말~6월 중 의원 방문단을 구성해, 일본 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일 이후에도 일본 측의 답방을 기획하는 등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대 일본 의회외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역량을 한데 모을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1차 간담회가 함께 진행돼,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탄자니아 주한대사 면담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5월 13일 국회부의장실에서 주한 탄자니아 마수카 대사를 만났다.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마수카 대사는 이 자리에서 만년설이 덮인 킬리만자로 풍광, 세렝게티의 동물들, 품질 좋고 값싼 탄자니아산 깨와 견과류를 한국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유통망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탄자니아 가수 다이아몬드 플래트누미 내한공연과 탄자니아 국경일(4월 26일) 리셉션 행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통합물관리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5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통합물관리 1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주승용 국회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국회물포럼은 5월 28일 물 관련 3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의 통과 1주년을 기념하고, 오는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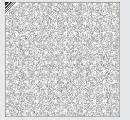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통합물관리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는 조속한 체제정비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 제도 조직 정비에 못지않게 예산 개편도 매우 중요하다”며 “통합물관리 이전과 다른 예산개편방향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물포럼은 물 관련 법률의 제·개정 지원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적절한 균형과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 2019년 1월 설립됐다.

국회 법제실,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방안 입법정책토론회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5월 24일 동두천시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과 공동으로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방안 입법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입법조사처,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인 동두천 제생병원의 활용과 대책마련을 위한 입법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원 의원은 “15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동두천시 제생병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치안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생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정부주도 해결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제생병원의 실질적인 정비 방안을 모색해, 신속한 개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적절한 관리와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비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 법제실은 이날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연수원, ‘국회의정아카데미 명사특강’ 개설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5월 24일부터 6월에 걸쳐 매주 금요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정아카데미 명사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국회 직원들의 입법지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 명사들이 강사로 나서 전문지식과 삶의 지혜를 공유할 예정이다.

5월 24일 시인 정호승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강의를 시작으로 천문학자 이명현의 ‘외계지적생명체를 찾아서’(6월 7일), 작가 노회경의 ‘노회경 드라마 속 인생 이야기’(6월 14일), 서울대 교수 유성호의 ‘Mortui Vivos Docent: 죽은 자가 산 자를 가르친다’(6월 21일) 등이 이어진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이번 과정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감이 커 신청자가 130명을 넘었다. 문화예술, 우주, 법의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라며 “특히 ‘노회경 드라마 속 인생이야기’ 강의는 질의응답에 충분한 시간을 둘 예정이어서 직원들과 상호 교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정아카데미 명사특강 일정>

날 짜	제 목	강 사
5. 24.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사랑과 고통의 본질과 이해	정호승(시인)
6. 7.	외계지적생명체를 찾아서	이명현(천문학자·과학저술가)
6. 14.	‘노회경 드라마’ 속 인생이야기	노회경(작가)
6. 21.	‘Mortui Vivos Docent’: 죽은 자가 산 자를 가르친다	유성호 (서울대 의대 교수)
6. 28.	마술 같은 미술: 빈센트 반 고흐로 읽는 미술 이야기	양정무(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교수)
7. 5.	행복의 과학: 누가, 언제, 왜 행복한가?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한국학술정보협회(회장 허용범 국회도서관장)는 5월

23일, 24일 양일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김석기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장과 한국학술정보협회 회원기관 대표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전자도서관의 지식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02년 국회도서관 주도로 설립됐으며, 현재 1천992개 도서관(대학도서관 416개, 전문도서관 754개, 공공도서관 710개, 학교도서관 112개)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로, 매년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통해 최신 정보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논의한다.

이번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는 '데이터융합과 더 큰 도서관 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KAIST 이민화 교수(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융합)와 허용범 국회도서관장(데이터융합과 더 큰 도서관 세상)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 학술정보신경망 조성, 저작권법 개정 분과 토론 및 최신 정보 기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동향 & 이슈 제9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의 재정 지표 추이 및 주요 재정 이슈, 외국의 재정동향을 소개하는 'NABO 재정동향 & 이슈'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2019년 3월까지의 총수

입·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현황 등 주요 재정지표 추이 및 변동 원인을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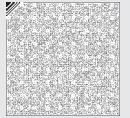
다음으로 주요 재정이슈 부문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생활 SOC 추진 계획',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동향', '혁신성장동력 이행현황 점검결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2019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규모',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등 총 9개의 이슈를 선정하고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및 자원확보 문제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재정동향으로 'OECD 주요국 연구개발비 투자규모 비교', 'OECD 새로운 일자리 전략 발표', '유럽연합 재정감독제도의 발전 및 향후전망' 등 주요 국제재정기구에서 발표하는 재정관련 보고서의 내용 및 최근 외국의 재정 제도 변화의 흐름을 소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중국 정협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5월 20일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사회·법제위원회 선더용(Shen



Deyong) 위원장(장관급)을 포함한 중국 대표단 8인과 자원봉사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대표단을 맞이하며 “선더용 위원장님의 방문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돼 양 기관 모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에 선더용 위원장도 양 기관 간 교류·협력에 관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황선호 기획협력담당관의 국회입법조사처 소개에 이어 박영원 안전행정팀장이 ‘한국의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 현황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직후 양 기관의 활발한 질의응답과 대화가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입법조사처와 중국 정협은 양국의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양 기관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5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원 1주년 기념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개원기념식에서 박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연구원의 역할이 “대한민국호가 이대로 가다가는 암초에 부딪힌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 변화가 필요한 개혁과제를 알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진 원장은 “첫돌을 맞이해 돌잡이를 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잡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선욱 미래연구원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연구원이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래연구원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모든 관련 기관이 이를 지지하고 지켜주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의장 취임 당시 제시한 3가지 비전 중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차원에서 미래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은 미래연구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의 플랫폼으로서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개원기념식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좌장인 송하중 경희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는 그간 미래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실적과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 김홍범 연구지원실장이, 두 번째는 13개 분야별 미래연구원의 예측시나리오와 개혁과제 등에 대해 김유빈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임시정부의 존립위기를 수습한 송병조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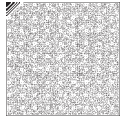
1935년 10월 의정원 회의에서 보선된 국무위원(앞줄 왼쪽부터 조완구·이동녕·이시영, 뒷줄 송병조·김구·조성환·차리석)

1930년대 중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존립위기를 맞았다. 여러 정당 및 단체들이 통일운동을 추진하면서 임시정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대두됐고, 이들이 통일을 이루어 민족혁명당을 결성하면서 존립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정부를 지켜내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다. 의장 송병조(宋秉祚)였다.

송병조(1877~1942)는 평안북도 용천 출신으로 목사였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 활동하다가 3·1운동 후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안창호가 주도하던 흥사단에 들어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도 참여해 활동했다. 1925년 미주지역 대표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의정원에 참여했고, 1926년 8월 최창식(崔昌植)에 이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세 달 만인 11월에 사퇴했다.

1934년 1월 다시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시는 여러 정당 및 단체들이 통일운동을 벌이고 있던 때였다. 1930년을 전후해 중국지역에서 여러 정당들이 결성됐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심이 된 한국독립당을 비롯해, 북만주의 한국독립당과 남경의 한국혁명당이 통합을 이룬 신한독립당, 남만주에서 이동해온 조선혁명당, 미주지역과 연계된 대한독립당 그리고 의열단이란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사이에 통일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통일운동은 1932년 10월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이 결성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1931년 9월과 1932년 1월 일제가 만주와 상해를 침략한 것을 계기로, 여러 단체의 혁명역량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대일전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통일동맹의 주도로 전개된 통일운동은 각 정당 및 단체를 완전히 해



체하고, 새롭게 ‘단일당’을 결성하자는 것으로 추진됐다. 이때 단일당이 결성되면서 ‘임시정부는 폐지하자’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임시정부 폐지’가 대두되면서 임시정부를 유지·옹호하고 있던 한국독립당은 곤경에 처했다. 임시정부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임시정부를 폐지하고 단일당 결성에 참여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의견은 둘로 갈라졌다. 김두봉·조소앙·양기탁 등은 단일당 결성 참여를, 송병조는 이동녕·조완구 등과 함께 반대를 주장했다. 찬반양론이 맞서는 가운데, 당임시대표대회가 소집됐다. 회의결과 다수결로 참가가 결정됐고, 이를 위해 당은 해체한다는 것도 결정됐다.

한국독립당의 참가가 결정되자 통일운동은 급진전됐다. 한국독립당·의열단·신한독립당·조선혁명당·대한독립당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혁명단체대표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기존 정당 및 단체는 완전히 해체하고, 새롭게 ‘단일당’을 결성한다는 것이 결정됐다. 이에 이들 5개 정당 및 단체는 통일을 이루었고, 1935년 7월 5일 단일당으로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

정당 및 단체들의 통일운동으로 민족혁명당 결성

민족혁명당이 결성되면서 임시정부는 존립위기에 직면했고, 무정부상태가 됐다. 단일당 결성은 임시정부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민족혁명당의 결성으로 임시정부는 존립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세력기반이었던 한국독립당은 해체됐고, 국무위원 7명 중에서 김구식·조소앙·최동오·양기탁·유동열 5명

이 단일당에 참가했다. 이들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면서 국무위원을 사임했다. 송병조와 차리석만 남았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무정부상태가 되고 말았다.

당시 송병조는 세 가지 직책을 맡고 있었다. 한국독립당 이사장, 임시정부 국무위원, 임시의정원 의장이었다. 한국독립당 이사장직은 당임시대표대회에서 단일당 참가가 결정되자 사퇴했다. 그렇지만 차리석과 함께 국무위원직을 유지했고, 의정원 의장직도 그대로 맡고 있었다. 송병조와 차리석이 국무위원을 유지하면서 임시정부는 폐지를 면할 수 있었다.

송병조와 차리석은 임시정부를 지키면서 무정부상태를 수습하고자 했다.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김구와 손잡는 것이었다. 당시 김구는 윤봉길 의거로 일제경찰의 체포위협을 받게 되면서 피신해 있던 중이었고, 이 동안 임기가 만료되어 국무위원이 아닌 상태였다. 그렇지만 한인애국단과 낙양군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시킨 청년들을 기반으로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었고, 단일당 결성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임시정부를 옹호·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천명하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의정원 회의였다. 국무위원은 의정원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송병조는 1935년 10월 의정원 회의를 열었다. 제31회 회의였다. 회의는 임시정부가 머물고 있던 항주에서 개최했고, 이를 통해 사퇴한 국무위원 5명을 보선했다. 김구·이동녕·이시영·조완구·조성환을 국무위원으로 선출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조직도 새롭게 갖추었다. 이동녕은 국무위원회 주석, 조완구는 내무장, 김구는 외무장, 조성환은 군무장, 이시영은 법무장, 차리석은 비서장 그리고



송병조 의장

송병조는 재무장을 맡았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존립위기에 벗어날 수 있었다.

임시정부를 옹호·유지할 수 있는 지지기반도 마련했다. 민족혁명당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독립당 인사들을 규합하는 한편, 김구와 손잡았다. 김구 휘하에는 한인애국단과 낙양군관학교 출신의 청년들이 있었다. 이들을 기반으로 1935년 11월 한국국민당을 창당했다. 당의 대표인 이사장에는 김구를 선임했고, 송병조는 이동녕·조완구·차리석·안공근·엄항섭·김봉준 등과 이사를 맡았다. 창당 이후 당의 청년조직으로 한국국민당청년단과 한국청년전위단을 조직해 세력과 지지기반을 확대시켜 갔다.

한국국민당이 창당되면서, 중국관 내 독립운동전선은 한국국민당과 민족혁명당의 양대 구도로 재편됐다. 흔히 임시정부와 한국국민당을 우익진영, 민족혁명당을 좌익진영으로 일컫는다. 이후 우익진영은 세력이 점차 확대됐고, 좌익진영은 약화되어 갔다. 민족혁명당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연이어 탈당했기 때문이다. 김원봉의 의열단계가 민족혁명당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자 조소앙과 홍진 등이 탈당해 해체된 한국독립당을 재건했고, 지청천·최동오 등 만주에서 활동했던 세력들도 김원봉계와 갈등을 빚다가 탈당해 조선혁명당을 조직했다. 민족주의 계열이 모두 탈당한 것이다. 이로써 민족혁명당은 통일정당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었고, 세력도 약화됐다.

송병조는 임시정부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의장으로 활동했다. 상해를 떠나 중국대륙 각지로 이동해 다니던 시기에, 또 민족혁명당 결성으로 임시정부가 존폐위기와 무정부상태에 몰렸을 때 의장을 맡고 있었다. 의장으로 이를 수습하고 임시정부를 되살려 냈다. 1939년 사천성 기강에 도착하면서 임시정부는 비교적 안정을 찾게 됐다. 10월 제31회 회의가 개최되자 의장을 사임했다. 6년 가까이 의장으로 활동한 것이다. 이후 1941년 의장 김봉준이 탄핵당하자 제33회 회의에서 다시 의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돼 1942년 2월 중경에서 세상을 떠났다. 🏠

글·사진: 한시준 교수(단국대 사학과 동양학연구원장)



국회에서 숲해설 들어보세요

숲해설가와 함께 국회 경내의 나무와 꽃·풀 등의 생태와 역사를 알아보는 ‘국회 숲해설
참관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관람코스는 잔디마당 및 사랑채 코스(40분), 헌정기념
관 코스(40분), 전체코스(90분)이며, 관람시간은 평일(주말·법정공휴일 제외) 10시와
오후 2시입니다. 국회 숲체험으로 도심 속 자연을 느끼며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글. 김현아 사진. 임진완

불법 공짜폰은 왜 자꾸 나오나



‘불법 공짜폰’이라는 용어에서는 묘한 모순 형용이 느껴진다. 소비자에게 무료로 주는 폰이라는 것 같은데 무료로 주는 그 친절한 행위가 왜 ‘불법’이라는 수식어와 결합되어 있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 휴대폰 판매와 관련한 중요한 법규를 알아야 하는데 그 핵심은 소비자에게 ‘정해진 공식 보조금’ 외에 다른 혜택을 추가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스마트폰 모델의 공식 보조금이 얼마인지는 휴대폰 가게에도 커다랗게 써 붙여놓고 이동통신 회사 홈페이지에도 올려놔서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법이다. 그런 법을 만든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휴대폰을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혜택을 받고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열심히 발품을 팔고 흥정을 하면 싸게 사고 그냥 아무 곳이나 들어가면 바가지를 쓰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취지는 소비자들과 판매상들의 계산이 빠르게 오가는 리얼한 삶의 현장에서는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 주말에 불법 공짜폰이 또 풀렸다는 뉴스를 가끔 듣게 되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

불법 공짜폰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팔면서 공식 보조금보다 훨씬 많은 파격적인 불법 할인혜택을 줘서 사실상 공짜로 휴대폰을 팔았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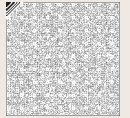
의미다. 그러나 말이 공짜폰이지 진짜 공짜는 아니다. 공짜폰을 받으면 대개 최소 5만 원 정도의 요금을 24개월 동안 계속 내야 하니까 이동통신 회사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단말기 가격을 손해보지는 않는다. 통신망이야 어차피 깔아놓은 것이니 고객 1명이 더 늘어도 운영비용이 더 들지는 않는다. 공짜폰으로 유혹해서 모셔온 고객이 최소한 그 휴대폰 가격 이상만 2년간 요금으로 내주면 통신회사는 남는 장사인 것이다.

이동통신 회사들의 고객 차별 전략

그럼 이동통신 회사들은 왜 1년 365일 공짜폰을 팔지 않는 것일까. 예를 들어 출고가 120만 원짜리 스마트폰에 공식 보조금을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공짜폰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여기에는 좀 더 복잡한 계산이 숨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객 차별 전략을 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고객 차별이란 가격이 비싸도 살 부자 손님과 가격이 비싸면 안 살 알뜰한 손님을 구별해서 부자 손님에게는 비싸게, 알뜰한 손님에게는 저렴하게 파는 전략이다.

가끔씩 게릴라식으로 파격 할인을 하는 것이 판매상들을 움직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갑자



기 등장하는 공짜폰들은 이동통신 회사들이 대리점들에게 ‘오늘부터 이 스마트폰을 팔면 대당 50만 원의 격려금을 드린다’는 식으로 깜짝 인센티브를 주면서 나오게 된다.

대리점들은 그 격려금을 받으려고 더 열심히 그 스마트폰을 팔게 되는데 문제는 대리점들이 뭘 더 열심히 한다고 그 스마트폰을 더 많이 팔 수가 없다는 데 있다. 결국 대리점들은 고객들에게 불법으로 현금을 살포하면서 고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들이게 된다. 출고가격 120만 원에 공식지원금 70만 원, 그리고 대리점이 주는 불법 보조금이 50만 원이 되면 그 스마트폰은 마침내 공짜폰이 된다.

판매상인들이 불법 보조금 아니면 판매를 늘릴 방법이 없다는 걸 아는 이동통신회사들이 대리점들에 대한 판매장려금(이건 합법이다)을 늘려서 사실상 보조금 살포 마케팅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벤트를 하지 않고 365일 내내 공짜폰으로 팔면 판매상들도 굳이 어제보다 더 열심히 팔지 않는다.

늘 싸게 파는 것보다는 갑자기 일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게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더 유리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걸 아는 이통사들은 정부의 단속이 뜸해진다 싶으면 항상 이런 불법 공짜폰 이벤트를 벌인다. 불법이긴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전략인 것이다.

불법 보조금 경쟁 단속의 함정

그러면 이런 불법 보조금 경쟁을 철저히 단속해서 어디나 동일한 가격에 휴대폰을 팔도록 하는 것

이 합리적이고 좋은 일일까. 일견 그럴 것 같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경제정책의 어려운 점이다.

전국의 모든 휴대폰 대리점이 동일한 모델의 스마트폰을 동일한 가격, 동일한 조건에 판다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 대로변 사거리에 고객들이 제일 자주 지나다니는 목 좋은 휴대폰 가게가 제일 이익을 많이 볼 것이다. 어디에 가나 가격이 같다면 사람들은 제일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대리점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골목 구석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에 가게를 연 휴대폰 대리점은 손님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불균형을 해소할 방법은 없다. 이런 불균형과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할인 판매뿐인데 그걸 불법으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로변 목 좋은 곳에 큰 가게를 낸 휴대폰 대리점이 돈을 잘 버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대로변 목 좋은 곳에만 가게를 내면 무조건 장사가 잘되니 그 가게의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게 건물을 갖고 있는 상가 주인이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

전국의 휴대폰 가격을 동일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마음 편하게 휴대폰을 구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법이 결국은 목 좋은 가게 건물주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길로 귀결되는 이런 아이러니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은 대부분 실패한다는 법칙을 또 한 번 확인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

글: 이진우(MBC 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패스트트랙, 협상의 의미를 다시 떠올린다



박경훈 기자
이데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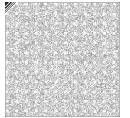
지난해 7월 국회에 배치된 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자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난장판 사태’를 꼽겠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전후로 벌어진 의회 내에서의 ‘공성전’·‘추격전’·‘감금 사태’는 국민들이 보기에, 또 행여나 ‘해외토픽’으로 전 세계에 퍼질까 얼굴이 부끄러워졌던 순간이다.

어찌 됐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거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신속처리안건은 공식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 여파는 지금도 정치권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택했다. 현재까지는 원내로 돌아올 명분조

차 찾기 어려워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강제 사보임(교체)’ 여파로 원내대표가 교체되고 당대표가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협상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

선거제 개편의 당위성을 떠나 이번 정국은 도대체 ‘협상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다양한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기자가 보기에 협상이란 ‘타결의사를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정의가 가장 와닿는다. 제대로 된 협상은 ‘윈윈(Win-



Win)’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은 진정한 협상이라 할 수 있었을까. 기자는 패스트트랙 지정 정국 전부터 정치 개혁특위를 취재하곤 했다. 문제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 자유한국당, 4 대 1의 전선이 펼쳐져 있었고, 답도 큰 틀에서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

사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받을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태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으로 의석이 줄어도, 한국당과 결이 다른 소수정당들이 약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반면 한국당은 의석을 잃는 것 말고 아무 실익이 없는 게임 아니냐”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맞교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 정개특위 내내 ‘자연 작전’을 쓰는 것이 일견 이해가 가기도 했다. 마지막에 ‘의원정수 10% 감소’, ‘비례대표 폐지’라는, 범여권에서 보면 다소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정치개혁안을 내놓은 것 역시 전략상으로는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들어가자 한국당은 드러눕고, 끌어내리고, 밤새 구호를 외치며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는 모습을 연출했다. 폭력 국회를 막자고 탄생한 패스트트랙 제도인데, 정작 그 패스트트랙을 막자고 폭력을 사용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것.

물론 범여권은 법에 정해진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다. 다만 원내 3분의 1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를 그냥 넘겨버려야 했는지, 한국당에게 줄 ‘당근책’을 제시할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든다. 게다가 패스트트랙 절차에 돌입해도 본회의에서 가결될 확률을 높게 보는 정치권 인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한국당이 상임위로 넘어간 패스트트랙 논의에 굳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바른미래당 내 협상 부재, 흑독한 결과 겪는 중

협상 부재의 결과를 흑독하게 겪고 있는 또 한 사례는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치면서 내홍이 줄어들기는커녕 사실상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결정타는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위원 두 명 모두를 강제 교체한 것이었다.

당시 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강행을 통해 과거의 갈등과 반목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당내 양대 계파인 안철수·유승민계가 모두 들고 일어나며 김 전 원내대표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다. 여기에 새로 오신환 원내대표가 들어서자 손학규 대표는 정상적인 정치·당무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 내의 복잡한 생존 환경을 들어 패스트트랙 무용론까지 조심스레 꺼내고 있는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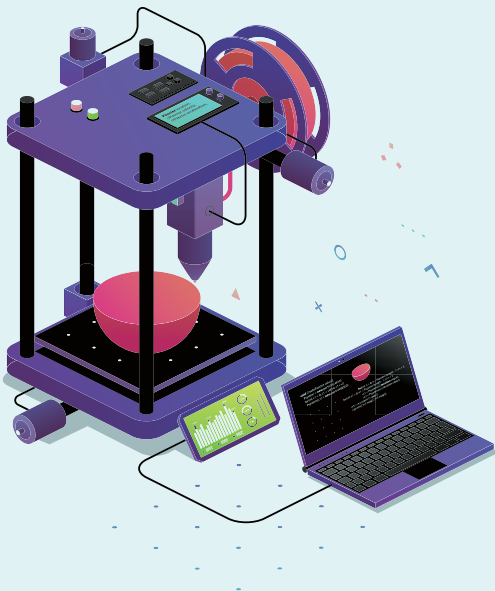
만약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협의절차를 거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전 원내대표와 다른 성향의 원내대표가 당을 지휘하게 됐고, 자칫하다간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영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기자는 현행 선거제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어느 것이 더 우월한 제도’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각 제도마다 특징과 장점이 있고, 그 ‘경기의 규칙’ 역시 ‘참여자’들의 공감대와 합의 속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만약 한국당의 거부 속에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된다 손 치더라도, 그 ‘물’이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떤 식으로 선거제가 개편돼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만 최소한 그 게임의 룰은 참여자들 대다수의 공감을 얻어야 함이 분명한 사실이다. 근대 국가에서 의회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는 칼 대신 입으로, 협박 대신 협상으로 문제를 처리하라는 취지에서다. 진정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는 정치권 모두 협상이란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금속 제품도 원하는 모양대로

- 금속 3D프린터



20XX년, 화성 도시 건설을 위해 지구를 떠난 최초의 이주민이 화성에 착륙한다. 화성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다. 거의 6개월 이상을 좁은 우주선에 꼼짝없이 갇혀서 날아와야 했다. 이주민들은 마침내 탁 트인 화성의 들판에 내려서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행성을 감개무량하게 바라본다. 감상적인 생각도 잠시, 곧 이들은 삶의 터전이 될 도시를 건설할 준비를 시작한다.

앗,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일할 준비를 시작하던 몇몇 사람이 깜짝 놀란다. 있어야 할 물건이 몇 개 없었던 것이다. 출발하기 전에 몇 번이나 점검했지만, 아무래도 제대로 도구를 챙기지 않은 것 같았다. 이주민들은 난감했다. 건설에 필요한 도구가 없다면 앞으로 일을 하는 데 굉장히 곤란할 터였다. 지구까지 다시 갔다 올 수도 없고, 택배로 부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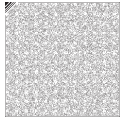
하다못해 가위 하나도 아쉽다. 가위를 만들려면 땅을 파서 광물을 캐고, 제련해 금속을 얻고,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작 몇 명이 맨땅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면 수많은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기술 문명의 대단함을 새삼 느낄 수 있다.

플라스틱에서 음식, 건물까지

그렇지만 방법은 있다. 복잡한 생산 시설이 없어도 원하는 도구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바로 3D프린터다. 종이에 글자가 그림을 찍어내듯이 입체로 물체를 찍어내는 기계를 말한다. 3D도면만 있으면 원하는 모양의 물체를 만들 수 있다. 요즘 3D프린터는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3D프린터의 용도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작은 물건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건물을 짓는 일까지도 가능하다. 특히 우주 여행처럼 원하는 물건을 쉽게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3D프린터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달이나 화성까지 간신히 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도구가 필요하거나 가지고 있는 부품이 고장 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럴 때를 대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도구나 부품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3D프린터를 가져가는 편이 훨씬 낫다. 3D프린터와 잉크를 가져간다면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마다 도면을 이용해 만들면 된다. 짐을 싣는 공간을 훨씬 많이 절약할 수 있다.

3D프린터의 잉크로 무엇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만들 수 있는 물건도 다양하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재료는 가공하기 쉬운 플라스틱이지만, 섬유, 고무, 콘크리트 같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3D프린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 생산 시설 기반이 없는 우주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찍어내 쓸 수 있을 것이다.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식품을 찍어내거나 바이오 소재로 인체 조직이나 장기를 찍어낼 수도 있다. 대형 3D프린터와 콘크리트를 이용하면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 달이나 화성의 흙으로 콘크리트를 만들어 건물을 찍어낼 수 있다면, 부피가 큰 건설 재료를 지구에서부터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제조업의 지형을 바꿀 금속 3D프린터

그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 금속을 재료로 쓰는 3D프린터다. 비교적 쉬운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을 3D프린터에 이용하는 건 특히나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속 3D프린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속 부품을 값싸고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매년 혁신적인 기술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금속 3D프린터를 2018년의 혁신적인 기술 한 가지로 선정했다.

이 기술은 잉크로 금속 분말을 이용한다. 크게 금속 분말을 ‘베드’에 평평하게 깔고 고에너지 레이저로 녹여서 층을 쌓는 방식과 레이저나 전자빔으로 재료를 녹여서 여기에 금속 분말을 공급해 쌓는 방식이 있다. 복잡한 구조도 세밀하게 만들 수 있고, 금속 덩어리를 깎아서 만드는 방식보다 재료의 낭비가 덜하다.

금속 3D프린터가 보편화되면, 금속 제품 생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자동차의 부품 하나가 고장 났다고 해보자. 지금이라면 자동차 회사에서 미리 생산해놓은 부품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교체한다. 오래되어서 부품이 단종됐다면 구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런데 3D프린터로 그때그때 부품을 만든다면, 어떤 부품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만들어 쌓아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 딱 필요한 부품만 만들어서 사용하면 그만이다. 오래된 자동차의 부품이 단종될 걱정도 없다. 도면만 보관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 쓸 수 있다. 다양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어진다. 몇 가지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방식에서 소비자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조금만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의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금속 3D프린터의 가격이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고, 설계도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 만들어진 금속 제품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도 3D프린터로 찍은 부품으로 만든 로켓 엔진을 시험했고, 민간우주기업인 블루 오리진이나 릴레이티비티 스페이스도 3D프린터로 로켓을 제작할 계획이다. 3D프린터를 이용하면 로켓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도 줄일 수 있다.

달이나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3D프린터는 빠지지 않는다. 물건을 우주로 올려 보내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현지에서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낫고, 그러기 위해서는 3D프린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NASA는 화성의 흙에서 금속을 추출해 3D프린터의 재료로 쓰는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3D프린터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을 테니 지구가 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

글: 고호관(과학칼럼니스트)

우리 금강산의 철학적 해석,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



겸재 정선, '금강전도', 국보 217호, 1734년, 종이에 엮은 채색,
130.6×94.1cm, 삼성미술관 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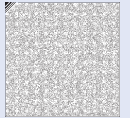
18세기 시인묵객(詩人墨客)들 사이에선 우리 산하를 둘러보고 그 모습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남기는 게 유행이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금강산이었다. 당시 금강

산에 관한 글과 그림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이었다.

겸재 정선을 두고 사람들은 '조선시대 화성(畫聖)'이라고 부른다. 겸재에게 최고의 찬사가 쏟아지는 건 그가 우리 산수를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 방식으로 그려낸 창조적 화가였기 때문이다. 그가 개척한 산수화는 다름 아닌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 중국풍의 산수, 관념 속의 산수가 아니라 우리의 산수를 직접 보고 그렸다는 점에서 진경산수화라는 이름이 붙었다.

겸재 정선은 한양의 북악산(당시 이름은 백악산) 자락,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자리에서 태어났다. 52세에 인왕곡(지금의 서울 종로구 옥인동)으로 이사했고 이곳에서 살다 84세에 세상을 떠났다. 정선은 하양(경북 경산 지역), 청하(경북 포항 지역), 양천(서울 강서구 양천구 지역) 등 지방의 현감을 하느라 몇 차례 서울을 떠나 살았던 적이 있지만 84년 긴 세월의 대부분을 서울 북악산과 인왕산 밑에서 살았다.

인왕산의 거대한 바위와 북악산의 우뚝 솟은 봉우리는 지금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한눈에 들어온다. 하물며 높은 건물이 없던 조선시대에는 어떠했을까? 인왕산과 북악산의 위용은 더 장엄했을 것이다. 게다가 인왕산과 북악산은 조선시대 수도 한양의 상징이었으니



그 산이 지닌 정신적 가치는 더욱 대단했을 것이다. 바위처럼 늘 변함없고 산처럼 늘 우직하게 살고 싶었던 조선시대 선비 문인들에게 인왕산과 북악산은 경외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정선은 이렇게 북악산과 인왕산 아래에 살면서 저 산봉우리, 저 나무와 바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늘 고민하며 붓을 들었다.

겸재 정선은 여러 차례 금강산을 찾았다. 정확하게 몇 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처음 찾은 시기는 1711년으로 추정된다. 그의 나이 36세였다. 그리고 그다음해인 1712년과 1747년에도 금강산에 올랐다. 정선은 금강산 그림을 많이 남겼다. 금강산 전체 모습을 그린 ‘금강내산(金剛內山)’, ‘풍악내산총람(楓岳內山總覽)’, ‘금강전도(金剛全圖)’, 단발령 고개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모습을 그린 ‘단발령망금강(斷髮嶺望金剛)’, 금강산의 고찰을 그린 ‘장안사(長安寺)’와 ‘정양사(正陽寺)’, 금강산의 폭포를 그린 ‘만폭동(萬瀑洞)’과 ‘구룡폭(九龍瀑)’, 금강산의 봉우리를 그린 ‘비로봉(毗盧峯)’, ‘혈망봉(穴望峯)’ 등.

모두 장쾌하고 매력적이지만 그중에서도 ‘금강전도’는 가장 압권이 아닐 수 없다. ‘금강전도’는 그의 나이 50대 말이던 1734년에 그렸다. 현재 국보 21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하고 있다. ‘금강전도’는 금강산 전경을 그린 다른 작품들과 기본적인 구도는 비슷해 보인다. 부드러운 토산(土山)과 날카로운 암산(巖山)을 대비해 표현한 것은 다름이 없다. 하지만 좀더 유심히 눈여겨보면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더 독특하고 더 대담하기 때문이다.

겸재는 금강산 1만2천 봉을 위에서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전체 금강산을 원형 구도로 잡았다. 그리고 토산과 암산을 좌우로 구분해 S자 모양으로 태극 형상을 만들었다. 오른쪽에 뾰족하고 강건한 골산(骨山)을, 왼쪽

엔 부드럽고 원만한 토산을 배치했다. 둥근 원형의 금강산 그림은 성스럽고 오묘하며 푸른 기운을 뿜어낸다. 토산과 암산은 기가 막힌 대비를 이루면서 화면 가득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의 대비가 참으로 절묘하고 대단하다. 그것은 둥근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융합을 일궈낸다. 음양의 합일, 바로 태극의 원리다.

그럼, 겸재는 어떻게 금강산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겸재는 주역(周易)에 정통했던 인물이다. 겸재는 주역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금강산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다. 토산은 음이고 골산은 양이다. 음양이 만나 하나의 세상을 이루고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낸다. 금강산은 우리의 세상이고 우리의 생명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나 마찬가지다. 우리 민족의 생명의 원천으로 여겼던 금강산. 겸재는 그 금강산을 주역의 철학과 태극 형상으로 연결시켜 그림으로 표현했다.

겸재는 화면 오른쪽 위에 제시(題詩)를 써넣었다. 그런데 이 제시 역시 금강산의 원형 구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행의 글자 수를 독특하게 배치했다.

萬二千峰皆骨山 何人用意寫眞顏 衆香浮動扶桑外
積氣雄蟠世界間
幾朵芙蓉揚素彩 半林松柏隱玄關 從今腳踏須今遍
爭似枕邊看不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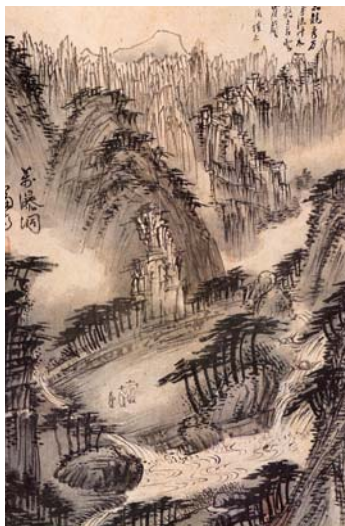
겨울 개골산 만이천 봉

누가 어찌 저 참모습 그릴 수 있으리오

꽃 향기는 동해 밖으로 떠오르고

그 기운 쌓여 온누리에 웅혼하게 서렸구나

봉우리는 몇 송이 연꽃인 양 뽀얀 빛 드러내고



겸재 정선, '만폭동', 비단에 엮은 채색,
33×22cm, 서울대 박물관



겸재 정선, '비로봉', 종이에 수묵,
100×477cm, 개인 소장

반쪽 숲엔 소나무 잣나무가 현묘한 도의 관문을 가렸네
비록 내 발로 걸어서 찾아간다 해도
베갯머리에서 내 그림 실컷 보느니만 못하겠네

우리 국토 금강산에 대한 애정과 고민이 흠뻑 묻어나는 시가 아닐 수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금강산을 답사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 누군가는 이 ‘금강전도’ 속의 금강산이 한 송이 꽃 같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림 맨 위의 비로봉부터 맨 아래 장안사 풍경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원형이 되어 연꽃 봉오리처럼 보인다.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면모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까닭에, 금강전도는 조선시대 그림 가운데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성찰적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겸재 정선의 새롭고 대담한 화풍은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조선시대 정선의 집 앞에는 그의 그림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정선의 그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정선 또한 부지런히 많은 그림을 그려야 했다. 어찌나 그림을 많이 그렸는지, 겸재가 사용해 뭉툭해진 붓을 모아놓으니 그 양이 무덤을 이룰 정도였다는 얘기까지 전해온다. 그림 주문이 너무 많아 정선은 그림을 그리느라 분주하고 피곤한 날을 보내기 일쑤였다. 여든의 나이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촛불 아래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금강전도’는 세로 130.6cm, 가로 94.1cm의 대작이다.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상서로운 기운이 푸르게 물려온다. 양과 음이 한데 어울려 꿈틀거린다. 당당하고 장쾌하다. ‘아, 저게 금강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금강전도’는 우리 전통 회화 가운데 가장 철학적인 작품임에 틀림없다. 🍵

글·사진. 이광표 교수(서원대 문화유산학)



피란길에 오른 제2대국회, 군복에 권총 찬 의원



총기휴대 허가증



군복착용 허가증



통행 허가증

임기 2년의 제헌국회가 미 군정에 의해 치러진 선거였다면 임기 4년의 제2대국회는 제헌국회가 제정한 선거법으로 치러졌다. 신익희 국회의장은 1950년 6월 19일에 행한 제2대국회 개원사에서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우리들의 힘과 책임으로 실시된 총선을 치러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을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제헌국회가 ‘건국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본 틀을 짜는 한시적 성격’이었다면 제2대국회는 우리 손으로 만든 법으로 구성한 국회로 ‘명실상부한 의회의 모습을 갖춘 국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원(院) 구성 6일 만인 6월 25일 한국전쟁에 휩싸이게 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의원들은 대전, 대구, 부산 등지의 임시의사당에서 전시에 필요한 입법활동과 민심수습을 위해 사선을 넘나들어야 했다. 이른바 ‘피란국회’다.

피란시절 국회는 전황(戰況) 보고와 치안유지, 민심수습, 전쟁복구 등을 위한 입법과 예산조치에 나서는 등 전시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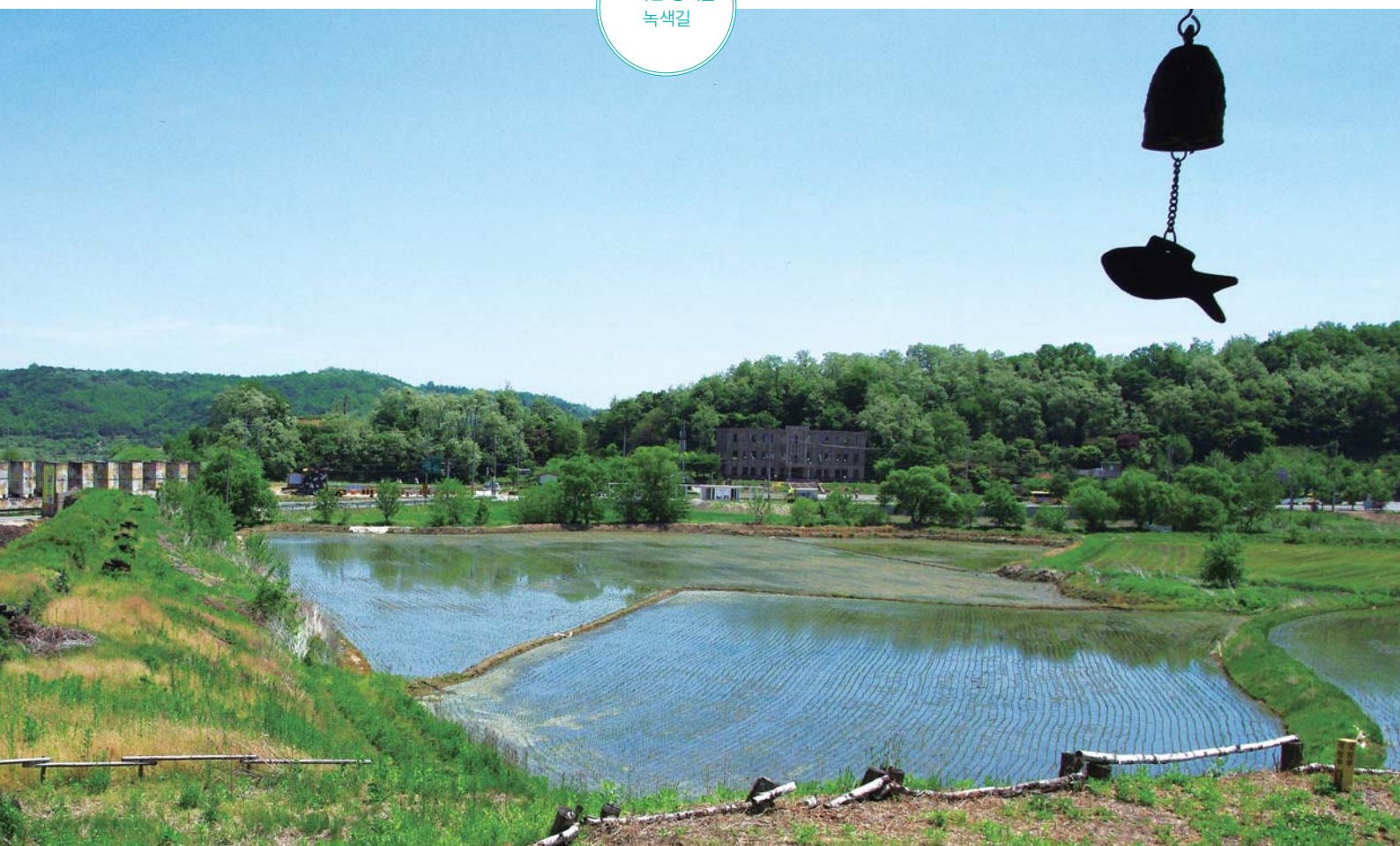
전시국회의 이면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자료가 있다. 야간통행증과 총기휴대 허가증 그리고 군복착용 허가증이다. 통행 허가증은 미군 당국이 육흥균(제헌·2대) 전 의원에게 발급한 것이고 총기휴대증은 내무부 장관이 이상돈(제헌·5·6대) 전 의원에게 발급한 것이다. 권총은 영국제 32구경이며 총기휴대증 앞면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휴대용 총기는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준 호신용인 듯하다. 그리고 군복착용 허가증은 헌병사령관이 발행한 것으로 전시 중 군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전쟁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자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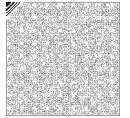
전쟁의 상흔에서 피어난 푸르른 생명들

강원도 철원군 한여울길 5코스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강원도 철원군 한여울길 5코스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은 철원 노동당사에서 시작해서 소이산 둘레를 걸어 정상인 평화마루공원에 오른 뒤 다시 출발했던 곳에 도착하는 약 5.5km 코스다. 한국전쟁의 역사를 품고 있는 이 길을 걸으며 전쟁의 상흔에서 피어난 푸르른 생명들을 보았다.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백마고지를 바라보며

1952년 10월 6일 저녁 4만 명이 넘는 중국 인민지원군이 철원 북방 395고지를 공격했다. 이에 맞서 2만여 명의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이 힘을 모아 싸웠다. 9일 동안 12차례의 공방전을 치렀다. 중공군 1만여 명, 국군 3천5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전투는 10월 15일 오전에 국군의 승리로 끝났다. 한국전쟁 때 백마고지전투에 대한 설명이다. 포격으로 인해 고지의 모습이 백마같이 변했다고 해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한다.

소이산 꼭대기 평화마루공원에 오르면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 백마고지가 멀리 보인다. 그 주변으로 넓게 펼쳐진 철원평야 풍경이 고즈넉하다. 평화마루공원에서는 아이스크림 고지도 보인다. 포격에 의해 산이 아이스크림 녹듯 흘러내렸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고지라는 이름이 붙었다(원래 이름은 삽슬봉이다).

포연이 자욱했던 전장, 60여 년 세월이 고스란히 쌓인 그곳에 햇볕은 송곳같이 내리쬘고 바람이 분다. 컷불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있어 더 적막하다. 그저 그렇게 그 풍경 앞에서 있었다.

평화마루공원은 강원도 철원군 한여울길 5코스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의 백미다. 철원 노동당사에서 시작해서 도로 옆, 논길, 소이산 숲길, 소이산 평화마루공원을 지나 다시 노동당사로 돌아오는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은 전쟁의 상흔에서 피어난 푸르른 생명들을 만나는 길이다. 그 길에서 푸르른 희망을 본다.

길이 시작되는 노동당사로 가려면 동송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군내버스정류장에서 13번 버스를 타야 한다. 버스 시간이 남아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점심때는 아니었지만 새벽밥을 먹어서 그런지 속이 출출했다. 밥맛 좋은 철원오대쌀의 고장이라 그런지 밥 자체가 맛있게 느껴졌다. 든든하게 속을 채운 뒤 버스를 타고 노동당사 앞에서 내렸다.

노동당사 앞에 서다

분단의 역사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철원 노동당사 건물 앞에 섰다. 앙상하게 남아 있는 철원 노동당사 건물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역력하다. 건물 곳곳에 포탄과 총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해놓았다. 건물 둘레를 한 바퀴 돌아본다. 총알에 파인 흠 아래에서 꽃이 피고 부서진 건물 모서리에서 풀이 자라 공중에서 나부낀다. 전쟁의 상흔에서 푸르른 생명들이 자라난다. 하늘은 파랗고 햇볕은 짙다. 이렇게 아름다운 폐허는 처음이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철원 노동당사는 등록문화재 제22호다. 광복 이후 1946년에 지어져 한국전쟁 전까지 북한 노동당 철원군 당사로 사용한 건물이다. 당시에는 북한 땅이었다. 북한 공산당 지배 아래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이다. 북한 공산당은 이 건물을 지을 때 관할 지역 1개 리당 쌀 200가마를 건넸다. 지역 주민들의 노동력도 착취했다고 한다.

북한 공산당은 이곳에서 철원, 김화, 평강, 포천 일대를 관할했으며, 이 지역 애국인사 등을 체포하고 고문, 학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노동당사 옆에는 옛날 철원경찰서 터가 있다. 일제강점

철원
노동당사
내부



소이산
전망대



기에 만들어진 철원경찰서는 일제의 식민통치 전위기관이었다. 광복 이후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기도 했다.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안내판을 보며 걸어야 할 길과 주변 정보를 알아본다. 안내판 뒤로 소이산이 보인다. 걷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도로를 따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오가는 차를 조심해야 한다. 소이산과 논밭 풍경을 보며 걷는다. 논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간다. 소이산 숲길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정자에 도착했다. 멀리 철원 노동당사가 보인다.

숲길을 걸어서 평화마루공원에 도착하다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은 정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숲으로 들어가는 길 옆 철조망에 ‘군사 통제보호구역 내 지뢰매설 지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보인다.

‘지뢰’라는 단어에 긴장됐지만 “길은 안전하니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길만 따라가면 마음 놓아도 된다”는 노동당사 부근에서 만난 관광해설사의 말에 마음 놓고 걷는다.

철조망 옆을 걷는 숲길 이름이 지뢰꽃길이다. 이 지역 정춘근 시인이 ‘지뢰꽃’이라는 시를 썼다. 노동당사 앞에도 ‘지뢰꽃’ 시비가 있고, 지뢰꽃길에도 ‘지뢰꽃’ 시비가 있다. 시인은 지뢰밭에서 피어난 꽃을 보았고, 그 꽃을 꺾으

면 일제히 뇌관이 터져 화약 냄새가 날 것 같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꽃들은 왜 가시 철망에 찢긴 가슴으로 꽃을 피워야 하나’는 물음도 잊지 않았다.

길 옆에 전망데크가 나왔다. 눈이 펼쳐진 평범한 시골 마을 풍경이 보인다. 그러나 그곳은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이었다. 그 풍경에 보이는 대마리는 1968년 제대한 군인과 지역 주민을 선발해서 만든 마을이다. 민통선 북쪽에 농지를 만들고 마을을 세우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들이 농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지뢰가 폭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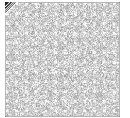
해 팔다리를 잃고 불구가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길은 소이산 정상으로 이어진다. 소이산 꼭대기에 평화마루공원이 있다. 햇볕 쨍쨍한 시간, 그늘 없는 오르막 길이 된다.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길모퉁이를 돌아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두 분은 걸음을 맞춰 아주 천천히 함께 걷고 있었다. ‘혹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이곳 전투현장에 있었던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따라 걸었다.

소이산은 봉의산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부터 봉수대가 있었다고 한다. 해발 362m지만 꼭대기에서 보면 사방으로 전망이 트인다. 평화마루공원은 미군이 레이더기지로 쓰던 곳이다. 한국전쟁 때에는 발칸포기지도 있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철원평야와 비무장지대가 보인다. 백마고지(백마산), 김일성고지(고암산), 평강고원, 아이스크림 고지 등을 볼 수 있다.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다. 바람이 등을 떠민다. 이제는 내려가라는 뜻 같았다. 출발했던 철원 노동당사로 가는 길, 논 위로 하얀 새 한 마리가 난다. 파란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오른다.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있다’와 ‘없다’의 띄어쓰기

지난달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최후의 일인이 된 학생은 최종 단계에서 띄어쓰기 문제를 풀지 못해 탈락했다. 1단계 철자법 문제는 정답을 말했는데, 2단계 띄어쓰기 문제에서 탈락한 것이다. ‘눈치코치 없이’를 바르게 띄어 쓰는 문제였는데 붙여 써야 한다고 답을 했다. 어쨌면 그 학생은 ‘온데간데없다’나 ‘간곳없다’와 같이 ‘없다’가 붙어 복합어를 이룬 말이 많은 것을 알고, 이에 근거하여 ‘눈치코치없다’도 하나의 복합어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우리말에는 ‘있다, 없다’가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룬 단어가 꽤 있다.

- (1) ‘있다’ 복합어: 재미있다, 맛있다, 관계있다, 상관있다, 뜻있다 등
- (2) ‘없다’ 복합어: 재미없다, 맛없다, 관계없다, 상관없다, 쓸모없다, 보잘것없다 등

위의 예들은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그런데 ‘있다’와 ‘없다’가 대칭을 이루며 복합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서 ‘뜻있다’는 붙여 쓰지만 ‘뜻 없다’는 띄어 써야 하고, ‘쓸모없다’는 붙여 쓰지만 ‘쓸모 있다’는 띄어 써야 한다. 또한 의미적으로 대칭을 이루기 어려워 어느 한쪽만 복합어가 되는 단어도 있다. ‘보잘것없다’라는 말은 있지만 ‘보잘것있다’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 (3) ‘있다’ 구절: 관심 있다, 뒤끝 있다, 힘 있다, 가치 있다, 의리 있다, 의미 있다 등
- (4) ‘없다’ 구절: 필요 없다, 어쩔 수 없다, 발 디딜 틈 없다, 할 수

없다, 의리 없다 등

그런가 하면 위의 예들은 복합어가 아니므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복합어 설정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근거가 있으면 좋으려만 한 단어처럼 자주 쓰이는가 아닌가 정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부사로 사용되는 단어는 더 헛갈린다. ‘말없이’라는 부사는 붙여 써야 하지만 ‘말없다’라는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말 없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살아 있다’와 같이 본용언 뒤에서 보조용언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국어사전을 찾아서 확인하며 익히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복합어로 보는 또 하나의 기준은 그 표현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큰집’과 ‘큰 집’은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는데, 이때 뜻이 달라진다. 붙여 쓰면 복합어로서 “집안의 맏이가 사는 집”이라는 뜻이고 띄어 쓰면 “규모가 큰 집”을 말한다. “그 사람 참 안됐어”의 ‘안되다’는 “가없어 마음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복합어이고, “말도 안 돼”의 ‘안되다’는 ‘되다’의 부정 표현이다. 그러므로 전자는 붙여 쓰고 후자는 띄어 쓰는 게 옳다.

‘눈치코치 없다’는 복합어가 아니고 ‘온데간데없다’는 복합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말 실력이 상당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적어도 이런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국어사전을 자주 펴는 수밖에 없다. 📖

글: 김미형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회장(상명대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과 국회 정상화 논의

2019. 5. 1 ~ 5. 31

- 1 ▶ 여야 5당 대표, 근로자의 날 맞아 한국노총 주최 마라톤 대회 참석
▶ 문무일 검찰총장,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발
- 2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며 국회에서 삭발
- 3 ▶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제21대 총선 때 여성과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공천 룰 발표
▶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광주시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 받아
- 4 ▶ 문희상 국회의장,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에서 전직 국회의장들을 초청해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충돌과 국회 정상화 등에 관한 조언 구해
▶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 발사
- 6 ▶ 5월 6일~8일 2박 3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 중국 베이징 조어대 만류당에서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 면담
- 7 ▶ 문희상 국회의장,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면담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관련 정보 공유와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에 관해 통화
- 8 ▶ 문희상 국회의장, 왕치산 국가 부주석 면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인영 의원 당선
▶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정부가 협력을 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
▶ 북한, 발사체 발사는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고 입장 밝혀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 밝혀
- 9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가져
▶ 북한,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 정부, 연말까지 세종시 소재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 폐지 방안 마련
- 13 ▶ 민주평화당, 새 원내대표로 유성엽 의원 선출
- 14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 진행에 차질 빚어
▶ 대통령과의 대표회담 형식을 둘러싸고 여당은 ‘선(先) 5당 대표 회동 후(後) 1대1 회담’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대표의 ‘1대1’ 대화 고수로 합의점 찾지 못해
- 15 ▶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 선출
▶ 총파업을 결의했던 전국 11개 버스 노조, 대부분 협상 타결로 파업 철회나 파업 유보
- 16 ▶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선고
- 18 ▶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각계 대표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 20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호프타임’ 형식의 회동 갖고 국회 정상화 논의
▶ 정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 승인
- 23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
▶ 문희상 국회의장,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사를 통해 참여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소회 밝혀
▶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9개부처 차관급 인사 단행
- 24 ▶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 격화
- 27 ▶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1주년 국회개원기념식’ 열려
▶ 문희상 국회의장, 러시아 및 발트 3국 공식 방문 위해 출국
- 30 ▶ 정부 ‘형가리 유람선’ 실종자 수색 총력… 신속 대응팀 급파

정리. 김종해

공정한 국회뉴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www.naon.go.kr에서 생생한 국회 소식을 만나보세요.

숭고한 희생 위의 소중한 평화

6·25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을 앞두고 낙동강, 양평 지평리와 함께 전쟁 당시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38도선 부근 가평전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전 근처의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 현장에서 총기 부품이나 신발 등이 발굴된 것들을 보면서 전쟁의 비정함, 무상함을 절감했었지요. 전쟁 때 숭고한 희생 위의 소중한 평화인 셈이지요.

발굴 작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원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양 측에서 수백만 명이 숨진 한국전쟁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보 6월호는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평화의 길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제작했습니다. 20년 가깝게 운영되면서 도입취지를 살리고 있는지 논란이 된 ‘인사청문회 제도’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평가나 교훈을 살리려는 토론회·포럼도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진보나, 보수냐에 따라 전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한국전쟁을 평가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책들도 앞다투어 독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으니 한 번쯤 접해보면 좋겠죠.

그 가운데 미국의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헬버스탐이 쓴 1천84쪽 짜리 ‘콜디스트 윈터(Coldest Winter)’는 잊어버리고 싶은 한국전쟁의 어두운 구석을 끄집어낸 작품입니다. 한국군의 역할은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미군 활약상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한계이지만, 참전용사의 증언을 통해 참상을 생동감 있게 전해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여의도 국회는 꽃과 새들의 잔치로 걸으려는 평화롭기 그지 없습니다. 경내 여기저기에서는 작약, 자란, 장미, 해당화, 유채꽃이 피어서 자태를 뽐냅니다. 피꼬리들은 국회와 여의도공원을 오가면서 고운 소리를 선사하죠. 그런데 국회는 원만하지 않고, 순항하던 남북 관계도 다시 고비를 맞고 있어 답답한 형국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 4월 총선 전초전을 하듯 국회 안팎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옵니다.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해 한 치의 여유나 여백을 느낄 수 없다는 국민들의 탄식이 들립니다. 건축물이나 도시도 여백이 있어야 전체적인 조화로움이 돋보인다고 하지요. 대치정국도 조금이나마 여유를 발휘해 숨통이 트이기를 희망해봅니다.

국회도 올 5월부터 숲해설을 실시중인데, 나무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랄 때 더 건강해지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한답니다. 정치도 상생이 바람직하겠지요. 해공 신익희 선생은 ‘서로의 주장이 다름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든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시기 정치권이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듯합니다. 🌻



이춘규
홍보기획관·편집인



국회문화극장

〈 영화 - 나의 특별한 형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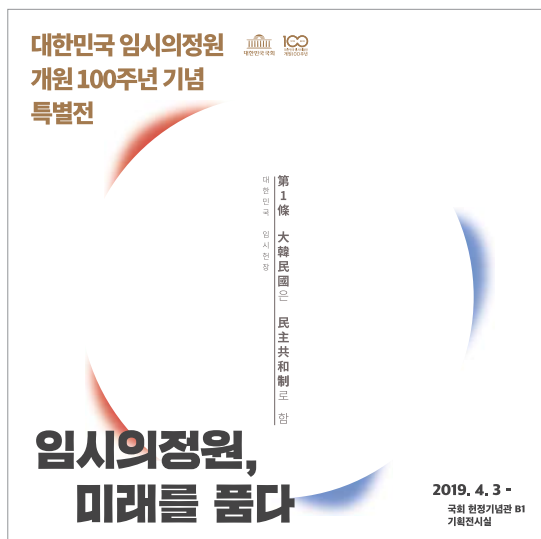
- 일 시 : 2019. 6. 20(목) 오후 7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감 독 : 육상호 / 114분 / 12세 관람가
- 출 연 : 신하균, 이광수, 이숨, 박철만, 권해효, 김해연, 김중기, 김경남
- 예 약 : 국회문화행사홈페이지 (<http://culture.assembly.go.kr>)를 통해
6월 10일(월)부터 예약 가능 (1인 최대 2인까지 예약 가능)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788-3111~2



국회아트갤러리 작품전

〈 빛 바랜 사진 넘어 - 독립운동가 초상화 〉

- 기 간 : 2019. 6. 3(월) ~ 2019. 6. 28(금)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 전시품 : 안한수 〈김구, 윤봉길 선생 상〉 등 회화 15점
- 추 천 : 최경환 의원실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788-2296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특별전

〈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 〉

- 기 간 : 2019. 4. 3(수) ~
- 장 소 : 국회헌정기념관 B1층 기획전시실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788-2296

